



법관인사 이원화의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개선방안

2024. 9. 25.

사법정책자문위원회

< 목 차 >

I. 검토 배경	1
1. 법관인사 이원화의 도입	1
2. 법관인사 이원화 추진 현황	2
3. 고법판사의 중도 사직 현상	5
4.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및 신규보임 관련 정책 변화	6
II. 법관인사 이원화의 연혁 및 추진 현황	8
1. 종전의 논의	8
2. 이원화 제도의 도입	8
가. 이원화 제도의 도입취지	8
나. 이원화 제도의 시행	9
3. 이원화 제도의 추진	11
4. 이원화 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14
가. 주요 긍정적 성과	14
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본 고법판사 제도의 문제점	15
III. 2024년 정책 변화에 따른 고법판사 제도 개선 방향	17
1. 개요	17
2. 순환근무 정책 변화 관련 검토	17
가. 종래 순환근무 실시 기준	17
1) 1차 순환근무	17
2) 2차 순환근무	20
나. 2024년 순환근무 기준 변경	22
1) 개요	22



2) 1차 순환근무 축소	22
3) 2차 순환근무 폐지	23
다. 2024년 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	23
1) 긍정적 요소	23
2) 부정적 요소	26
라.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의 개편 검토	27
1) 현행 고법판사 보임 및 근무 단위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	27
2) 고등법원 단위로 확대(원외부 통합)하는 방안	29
3)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	31
마. 소결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의 강화 및 순환근무의 축소	34
3. 신규보임 정책 변화 관련 검토	35
가. 종래 신규보임 대상 기준	35
나. 2024년 신규보임 기준 변경	36
다. 2024년 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	37
1) 긍정적 요소	37
2) 부정적 요소	39
라. 소결 ▶ 바람직한 이원화의 정착을 위한 신규보임 기수 상황	41
IV. 2024년 정책 변화에 따른 고법판사 제도 개선 세부방안	43
1. 개요	43
가. 정책 변화 요지	43
나. 순환근무 관련 세부방안 검토 필요성	44
2. 지방권 순환근무 관련 검토	44
가. 개요	44
나. 1차 순환근무 지속 가능 기간 예측	44
나-1. 2차 순환근무 재실시 관련 검토	46
다. 검토방안	47
3. 경인권 순환근무 관련 검토	61
가. 개요	61
나. 향후 경인권 공식 예측	61
다. 검토방안	62



V. 지방권 고법판사의 지원 활성화 방안	71
1. 지방권 고법판사 부족 문제	71
가. 지방권 고법판사 부족 현상	71
나.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 유인책 마련의 필요성	73
다.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 유인책 개괄	73
2. 지방법원 복귀를 확대 허용하는 방안	74
가. 개요	74
나. 종래 지방법원 복귀 허용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76
다. 지방법원 복귀 허용 확대의 필요성	76
라. 지방법원 복귀의 구체적인 허용 방식	78
1) 신청 자격의 부여 방식	78
2) 근무기간 요건	80
3) 허가 사유의 범위	81
4) 복귀 후 인사패턴	82
3. 다른 고등법원으로의 원소속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	82
가. 개요	82
나. 지방권 고법에서 수도권 고법으로의 원소속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	83
다. 수도권 고법에서 지방권 고법으로의 원소속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	85
4. 재판장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	85
가. 개요	85
나. 현행 규정의 내용 및 신설 경과 등	87
1)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 관련 법령	87
2)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3항 신설 경과	88
3) 법원조직법 개정 전후 서울고 관련 논의 경과	89
다. 고법판사 근무 요건 완화의 필요성	90
라. 고법판사 근무 요건 완화 방식	92
마. [참고] 2024. 7. 서울고 설문조사 결과	98
VI. 전문위원 제1연구반 논의 경과	101
[별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건의문(안)	107

I. 검토 배경

1. 법관인사 이원화의 도입

■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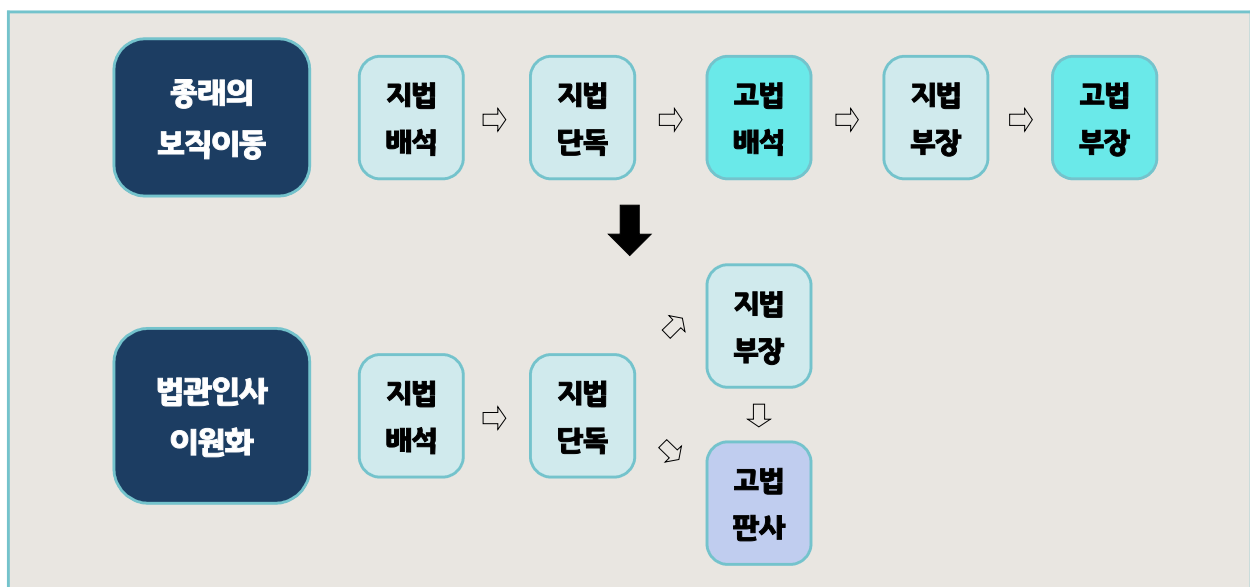
-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사는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보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

제11조(전보의 제한)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 고등법원 판사¹⁾는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 보하고 보임 후 지방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함 ⇨ 법관인사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이원화됨
- 2010. 12. 16. 법관인사규칙(대법원규칙) 제정으로 시행

■ 단계적 보직이동의 변화



- 종래에는 지법²⁾배석 → 지법단독 → 고법배석(법조경력 12~15년차) → 지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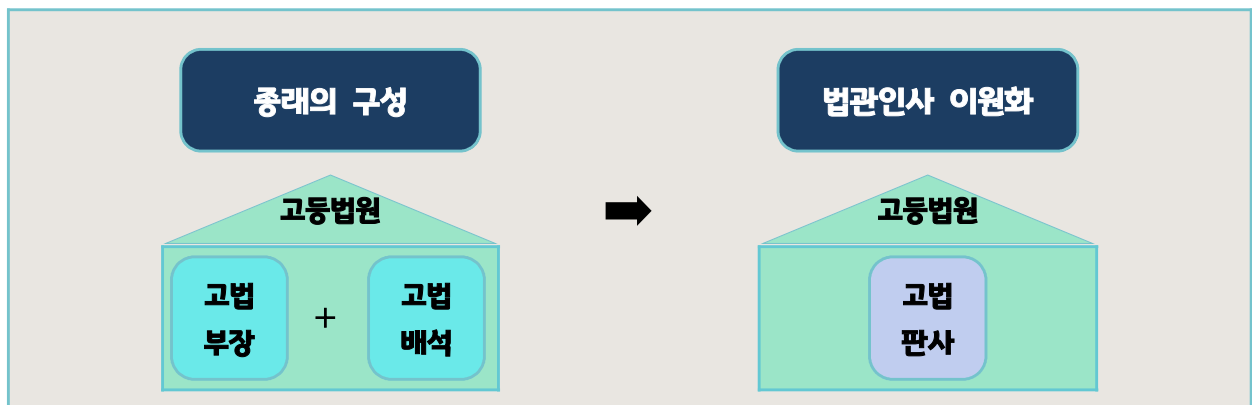
1)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보임되는 고등법원 판사를 의미하고, 이하 ‘고법판사’라고 함.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등법원에 전보되는 지방법원 판사는 편의상 ‘고법배석’(고등법원 배석)이라고 함



장(법조경력 16년차 이상) → 고법부장(법조경력 23년차 이상)의 단계적 보직이
동을 거침

-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라 지법부장 보임 무렵에 지법부장과 고법판사로 나누어
근무함

■ 고등법원 구성의 변화



- 종래 고등법원은 고법부장과 부장 보임 직전의 고법배석으로 구성되었음
-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라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법관은 고법판사(또는 고법부장)
로 단일화됨
- 다만, 고법판사가 충분히 보임되기 전까지는 고법배석³⁾이 여전히 고등법원에
근무하게 됨

■ 법관인사 이원화의 구상

-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모든 법관이 고법판사(또는 고법부장)로 구성되는 ‘법관
인사 이원화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제도 도입 당시에는 2018년경 이원화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함

2. 법관인사 이원화 추진 현황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으로 고법판사 보임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이 경

2) 이하에서는 경우에 따라 지방법원은 ‘지법’으로, 고등법원은 ‘고법’으로 약칭함

3) 종래와 같이 부장 보임 직전 기수에 한정하지 않고 지법배석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판사를 보임함



과하였음에도 **고법판사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고등법원 구성 현황**

구분		재판부 개수	현원 (법원장 제외)	고법부장	고법판사		고법배석	이원화 비율 ⁴⁾	
					현소속	원소속		현소속	원소속
서울고		52	158	57	101	101	0	100.0%	100.0%
경 인 권	서울고 인천부 ⁵⁾	3	9	0	5	2	4	55.5%	22.2%
	수원고	13	40	3	37	23	0	100.0%	65.0%
	소계	16	49	3	42	25	4	91.8%	57.1%
지 방 권	서울고 춘천부	2	6	0	2	0	4	33.3%	0.0%
	대전고	6	19	1	14	14	4	78.9%	78.9%
	대전고 청주부	2	6	0	5	4	1	83.3%	66.6%
	대구고	6	19	1	7	6	11	42.1%	36.8%
	부산고	6	18	3	13	13	2	88.8%	88.8%
	부산고 울산부	2	6	0	4	3	2	66.6%	50.0%
	부산고 창원부	4	12	0	6	2	6	50.0%	16.6%
	광주고	5	16	1	8	7	7	56.2%	50.0%
	광주고 전주부	2	6	0	3	1	3	50.0%	16.6%
	광주고 제주부	1	3	0	1	0	2	33.3%	0.0%
	특허	5	16	0	10	7	6	62.5%	43.7%
	소계	41	127	6	73	57	48	62.2%	49.6%
	합계		109	334	66	216	183	52	84.4%

※ 2024년 정기인사 기준(이하 같음)

- **현소속(해당 법원에 현재 근무 중인 법관)** 기준으로는 서울고, 수원고의 이원화 비율 **100%**로 이원화가 완성되었고, 지방권 이원화 비율 평균도 **62.2%**에 달함
 ☞ 다만, 서울고 소속 고법판사 등이 타 법원에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공석을 충원하고 있고 향후 소속 법원으로 복귀할 예정임을 감안해야 함
- **원소속(해당 법원에 최초 보임 및 근무 중인 법관⁶⁾)** 기준으로는 수원고의 이원화 비율 **100.0%→65.0%**, 지방권 이원화 비율 평균 **62.2%→49.6%** 등으로 서울고, 대전고, 부산고 등을 제외하고는 이원화 진행이 더딘 편임

4) (고법부장+고법판사)/현원 × 100(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 버림). 80% 이상은 파란색, 60% 미만은 빨간색 표시

5)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서울고 관할구역의 업무를 처리하는 원외재판부를 의미하며(서울고 춘천부, 대전고 청주부, 부산고 울산부·창원부, 광주고 전주부·제주부의 경우도 같다), 이하 원외재판부를 경우에 따라 ‘원외부’로 약칭함

6)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 원소속 변경 가능



- 원소속 기준 인천부 55.5%→22.2%, 춘천부 33.3%→0.0%, 창원부 50.0%→16.6%, 전주부 50.0%→16.6%, 제주부 33.3%→0.0% 등

▣ 현재 실질적으로 이원화가 완성된 법원은 서울고가 유일함 ➡ 서울고 소속 고법판사를 과원으로 보임하여 지방권 고법 등에 순환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전국 단위 이원화 완성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임

● 고법판사 현황(원소속 기준)

기수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합계
서울고	2	13	16	8	12	11	14	10	12	8	13	9	14	4		146
인천													1	1		2
춘천																0
수원고				1		1		3	1	4	3	7	4	1		25
대전고		1		1	2	1		1	1	2	1	1	2		1	14
청주		1					1						1		1	4
대구고	1	1		1	1		1	1			1					7
부산고				1	1	1	1	1	1	2	2	0	2	2		14
울산										1		1			1	3
창원											1		1			2
광주고			2			1	1				1	2				7
전주											1					1
제주																0
특허					1		2			1		2	1		1	8
합계	3	16	18	12	17	15	20	16	15	18	23	22	26	8	4	233

- 서울고 고법판사는 공석(101명)에 비하여 과원(146명) 상태임

- 한편, 지방권 고법의 이원화 완성은 단기간 내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특히, 대구고, 광주고 및 원외부는 지원자 부족 등으로 이원화 완성이 예상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

▣ 현재와 같은 추세로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정착이 요원하다는 우려 ➡ 순환 근무 방식 개편 또는 지방권 고법 유인책 마련 등 고법판사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3. 고법판사의 중도 사직 현상

▣ 고법판사의 중도 사직 증가

● 고법판사 퇴직자 수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퇴직자	78	65	60	64	51	51	65	64	47	65	89	79	69	77
고법 판사	1	0	1	1	2	6	9	7	1	11	9	13	15	14

※ 헌법재판관 임명, 사망 제외

- 최근 5년간 총 퇴직자 수의 16.4% ▷ 고법판사의 현원은 총 법관의 7.4%

● 고법판사 퇴직자 수 증가가 총 퇴직자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고법판사 제도 도입 이후 총 퇴직자 수가 안정되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임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총 퇴직자	80	106	80	98	75	87.8	75	78	65	60	64	68.4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총 퇴직자	51	51	65	64	47	55.6	65	89	79	69	77	75.8

▣ 고법판사의 사직 고려 사유

● 고법판사 설문조사 결과(2023년 고법판사 워크숍)

- ① 순환근무 부담 ▷ ② 경제적 이유 ▷ ③ 업무부담

■ 퇴직한 고법판사에 대한 조사 결과 ① 경제적 이유 ▷ ② 순환근무

- 순환근무 부담 관련 세부 사유: ① 지방근무 기간 ▷ ② 일률적 기준에 따른 지방근무 시기 ▷ ③ 지방근무 횟수 ▷ ④ 지방근무 회차 간 시간적 간격

● 실제로 고법판사 1~5년차, 서울고 근무 당시 퇴직자가 집중되고 있음 ☞ 서울고에서 지방권 순환근무 실시 전 퇴직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됨

■ 고법판사 연차별 퇴직자 수



연도 연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12														1	1
11															0
10															0
9												1	2		3
8											2	2	1		5
7										2		1	1		4
6							1	2	1		1		1	1	7
5						1	1	2		2		2	1	4	13
4						1	1	3		2		2	4	4	17
3				1	1	1	1				3	4	1	2	14
2						1	3			4	2	1	2	1	14
1	1		1		1	2	2			1	1		2	1	12
합계	1	0	1	1	2	6	9	7	1	11	9	13	15	14	90

고법판사 소속법원별 퇴직자 수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서울고	1		1	1	1	5	5	4		9	8	10	13	11	69
수원고													1	2	3
대전고						1	1	2			1	1			6
대구고					1				1						2
부산고							3			2		2	1	1	9
광주고															0
특허								1							1
합계	1	0	1	1	2	6	9	7	1	11	9	13	15	14	90

※ 퇴직 당시 소속 기준, 원외재판부 포함

- 장기간 강도 높은 항소심 재판업무에 종사함에 따른 피로감 등도 사직 고려 사유가 되고 있음

- ▣ 고법판사가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사직유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4.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및 신규보임 관련 정책 변화

▣ 2024년 정기인사 ▷ 순환근무 축소 및 신규보임 기수 상향

- 순환근무로 인한 심리의 연속성과 생활의 안정성 저해 및 수도권 고법판사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수도권 고법에는 이원화가 완성 단계인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
- 수도권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축소 시행



- 지방권 고법의 재판장(법조경력 20년 + 고법판사 근무 경력 3년)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10명)에서만 수도권 고법판사(서울고 9명, 수원고 1명) 대상으로 1차 순환근무만 실시하고, 2차 순환근무 미실시

- 수도권 고법판사의 신규보임 기수 상황

- 수도권 고법판사 신규보임에서 지법부장 최초 3개 기수(36~38기) 미보임

■ 정책 변화 관련 검토 과제

- 정책 변화의 배경과 상세 내용 검토 필요
- 특히, 순환근무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타당성 점검 및 향후 예측과 대처방안 등 마련 필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환근무 축소 정책의 타당성 점검
 - 향후 지방권·경인권에 대한 순환근무 대상 기수, 기간 및 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세부방안 검토
 - 지방권 부족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신규보임 관련 정책에 관하여도 면밀한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수립 필요

II. 법관인사 이원화의 연혁 및 추진 현황

1. 종전의 논의

■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은 고법부장 선발제도와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음

● 1993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 1997년 법원인사제도개편위원회, 2003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등

■ 2004. 11. 15. 사법개혁위원회 24차 회의에서 채택된 건의문

법조일원화와 법원의 인적·물적 기반의 확충, 법관에 대한 계속교육, 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하여 제1심을 강화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항소심·상고심은 보다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심급별로 자격이 구분되는 법관으로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을 구성하는 제도를 지향하여 제1심 법관의 자격보다 더 많은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항소심 법관을 선발하고, 궁극적으로 항소심은 사후심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1심의 단독재판부 비율을 높여 가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대등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주요 쟁점에 한하여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인사구조 개편 등을 통한 1심 강화를 전제로, 이에 발맞춘 **항소심의 인적역량 강화와 심급구조 개선에 초점**을 둠

2. 이원화 제도의 도입

가. 이원화 제도의 도입취지

구분	목표	고려사항
재판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항소심 재판의 연속성, 효율성,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법판사의 근무기간을 장기화함으로써 <u>고법배석의 진입적 체 및 근무기간 단기화 문제를 해결</u>할 수 있음 · 지방부장급을 고법판사로 보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
	항소심 재판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부를 대등하게 구성함으로써 실질적 합의가 가능 · 주심판사의 적극적 역할이 강화됨



구분	목표	고려사항
	중견 법관의 중도 사직 최소화	· 고법부장 보임 기수의 중견 법관의 중도 사직을 막고, 나아가 전관예우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음
법관인사의 측면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부합	·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종전과 같은 단계적 보직 이동의 인사패턴이 유지될 수 없음
	지방법원 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근무의욕 고취	· 원칙적 1심 단독화의 추진과 함께 1심 재판의 연속성,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수석부장, 지원장은 지방법원 판사로 보임하게 되어 지방법원 판사의 근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음
	잡은 대규모 전보인사의 폐해 완화	· 잡은 대규모 전보인사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음
사법행정의 측면	법원의 관료화 완화	· 법원 관료화의 중심에 있는 고법부장 선발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법관의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강화할 수 있음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의 축소	· 이원화 제도가 완성되면 사직 등의 공석에 대하여만 인사를 하게 됨으로써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음

나. 이원화 제도의 시행

■ 2010. 3. 26.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건의문

1. 지향점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의 인사체계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관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하급심의 심리 역량 저하와 전관예우 의혹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1심과 항소심 법관의 전문성을 제고함

-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맞춰 지방법원을 사실인정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단독판사로 이루어진 사실심 법원으로 발전시켜 나감

2. 구체적 건의안

- 지방법원과 고등법원간 상호 순환 교류 인사를 지양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을 희망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나누어 고등법원 판사는 고등법원에서만, 지방법원 판사는 지방법원에서만 근무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면 법관 임용시부터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관의 조기퇴직 방지와 전면적 법조일원화 대비에 초점

■ 2010. 9. 27. 인사총괄심의관 '법관인사이원화방안'



1. 이원화의 필요성

(1) 본격적인 법조일원화 실시

- 단계적 보직이동의 인사패턴은 변화가 불가피함

(2)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 극복

- 법관의 중도 사직 문제
- 고법배석 근무기간 단기화에 따른 재판역량 약화

(3) 의견수렴 결과

-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법관의 90.9%가 이원화에 찬성

2. 이원화 방안

- 법관을 고법판사와 지법판사로 이원화하여 고법판사로 보임되면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고 지방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도록 함
- 이행기 완료시점 즉, 고법 배석판사 공석이 고법판사로 모두 채워지게 된 시점 이후에는 연수원 기수 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법조인을 대상으로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에 대하여 고법판사를 선발함

6. 전보인사 등

■ 전국 단위의 전보인사 시행

- 지방권 소재 고등법원 공석의 일부만을 지역법관으로 충원, 서울고법 소속 고법판사와 지방권 소재 고법 소속 고법판사 공히 소속 외 권역 고법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 지방법원 복귀 가능 여부

- 고법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10년) 내에 지법판사로 전보될 수 없음
- 고법판사로서 1차 임기를 마친 이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법판사 또는 사군법원 판사로 전보하는 방안 고려

■ 지방법원장 등의 보임

- 이원화 완성 이후에는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수석부장, 지원장은 원칙적으로 지법판사 중에서 보임함

■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의 보임

- 이행기 초기에는 현행 패턴과 같이 고법 배석판사가 재판연구관으로, 고법판사나 지법부장이 부장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될 것이나, 장기적으로 재판연구관은 대체로 지법판사나 로클럭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
- 사법연수원과 법원행정처 등에는 고법판사와 지법판사를 고루 배치

● 이원화 제도 도입 당시부터 권역별 보임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 단위의 전보인사 예정

- 이원화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법판사가 소속 권역 외 고등법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방안 예정

● 당초 계획에 따르면 25기가 고법부장에 보임될 무렵인 2018년경에 이원화가 완



성될 것으로 예상(2010. 10. 1. 전국법원장 간담회)

■ 2010. 12. 16. 법관인사규칙(대법원규칙) 제정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사는 상당한 법조경력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보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전보의 제한)

제1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부칙(2010. 12. 16.)

제2조(고등법원 판사 보임에 관한 경과조치)

- ① 대법원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판사로 고등법원을 연차적으로 충원한다.
- ② 고등법원이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판사로 전부 충원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의 일부를 보할 수 있다.

- 부칙에서 **이원화 완성 전까지 고법배석 보임** 근거 마련
- 2011년 정기인사에서 최초로 23~25기 법관 중 20명의 고법판사 보임

3. 이원화 제도의 추진

■ 2012. 11. 12.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제12차 회의 건의문

법관인사 이원화에 관한 건의문

- 현행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의 문제점 해소, 중견 법관의 중도사직 방지, 전면적 법조일원화 대비 및 고등법원 법관 전문화 등을 위하여 도입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는 평생법관제 등 사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이상적인 심급구조 개편의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 법관인사 이원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재판부 업무 경감, 실질적으로 대등한 합의부의 운영,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인적 자원의 균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판결 간이화,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 재판연구원 추가 배치, 바람직한 재판부 구성 및 운영 방안의 수립, 1심과 2심의 적절한 업무분장 및 소속 법관들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원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책에 관하여 지속적 검토 건의
- 2012년~2015년 정기인사에서 매년 지법부장 보임 직후 **최초 3개 기수 중 23~24명의 고법판사 보임**



■ 2015. 11. 13. 법원행정처차장 ‘법관인사 이원화와 고법판사 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

첫째로, 고법판사의 전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법관 정기인사 때부터 고법판사의 타 고등법원 전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고법판사의 재판경험을 확대하고 전국 고등법원 재판의 균질한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고법판사의 인사이동을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일반의 인사이동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중략) 전보의 시점은 원칙적으로 고법판사로 5년의 근무를 마친 시기입니다. 따라서 2016년에는 2011년에 보임된 25기 고법판사가, 2017년에는 2012년에 보임된 26기 고법판사가 그 대상이 됩니다.

둘째로, 고법판사를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고등법원 재판업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보임하는 방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고법판사는 고등법원의 재판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고등법원 재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현재 제도 시행 후 약 5년이 경과하였고, 고법판사도 약 110명에 이르고 있어, 법관 인력의 적절한 활용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2016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보직에 대하여 고법판사를 점진적으로 보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보임 범위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취지와 고등법원 재판역량의 강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인력 사정과 공석 현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고법판사의 지방법원 복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중략)

넷째로, 고등법원 재판부 구성 및 고법판사의 보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략) 법관인사 이원화를 조기에 완성하기보다는 고법판사의 보임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관련된 논의와 추가 검토의 결과를 기다려 이를 고등법원의 구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하 생략)

- 2016년 정기인사부터 **고법판사 1차 순환근무 실시**(25기 5명, 26기 1명), **비재판 보직 보임**(법원행정처 1명, 사법연수원 1명 등)⁷⁾
- 이원화 속도조절 필요성 ⇨ 2016년(13명), 2017년(14명) 신규보임 규모 축소

■ 2017. 11. 22. 법원행정처차장 ‘법관인사 방향 및 이원화 관련 안내말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완성시기는 그 전제가 되는 상황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확정하기 어렵지만 너무 멀지 않는 시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에 대해서는 이번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의 경우 고등법원의 재판장 보임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의 문제가 남는데, 이에 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이원화 의지 표명 ⇨ 2018년 **30명**의 고법판사 보임
- 2018년 정기인사에서 **마지막 고법부장 보임**(22~24기 14명)

7) 2015년에도 비재판보직 보임 사례 있음(법원행정처 1명)



■ 2018. 11. 5. 법원행정처장 ‘법관 인사제도 운영 방향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

이번 정기인사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고법판사로 충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부터는 고법판사 지원 대상기수를 사법연수원 25기부터 33기로 확대하되, 법관인사의 안정성과 기수별 형평 등을 고려하여 31기~33기를 우선 신규 보임할 예정입니다. (중략)

종래의 인사원칙에 따를 경우 이번 정기인사부터 지방권 고등법원에 고법부장(재판장) 공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권 고등법원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고법부장으로 전부 충원되지 않는 경우 그 공석은 지방권 고등법원에 근무 중이거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전보되는 24기 이하 고법판사로 충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 중인 24기 이하 고법판사는 서울고등법원 근무기간, 기수, 연령 등을 두루 고려하여 순차로 지방권 고등법원으로 전보 후 2년간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방권 고등법원의 이원화 진행 속도와 추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인사패턴의 지속 여부를 향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중략)

수원고등법원(5개 내외 재판부)과 수원가정법원이 2019. 3. 1.자로 개원될 예정이고,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1개 재판부)도 2019. 3. 1.자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서의 장기간 근무를 희망하는 고법부장, 고법판사의 인사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현재 고법부장, 고법판사 및 판사의 근무를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 2019년 정기인사부터 **고법판사 보임 기수 확대** ⇨ 2019년에 주력 기수(31~33기) 외에 25기 1명, 27기 1명, 28기 1명, 29기 2명 신규보임
 - 역대 최대 규모(40명) 보임
- 2차 순환근무 실시 ⇨ 24기 3명, 25기 2명(재판장 직무대리 형식)
- 2019. 3. 1. 수원고 개원 및 인천부 설치⁸⁾

■ 2020. 3. 24. 법원조직법 개정(2021. 2. 9. 시행) ▷ 고법부장 직위 폐지

법원조직법 제27조(부)

- ① 고등법원에 부를 둔다.
-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삭제)
- ③ ~~부장판사는~~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 2020. 12. 28. 법관인사규칙 개정 ▷ 재판장 자격 요건 신설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 ③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8) 참고로 1995. 9. 1. 제주부, 2006. 3. 1. 전주부, 2008. 9. 1. 청주부, 2010. 2. 11. 춘천부, 창원부, 2021. 3. 1. 울산부 각 설치



기준으로 한다)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

■ 2024년 정기인사 ▷ 수도권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축소 및 신규보임 기수 상향

4. 이원화 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가. 주요 긍정적 성과

■ 종래 고법부장 선발제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

● 종래의 고법부장 선발제도

- 법조경력 23~24년차의 지법부장 중 일부를 고법부장으로 선발 ⇨ 선발된 고법부장은 일정 기간 고등법원 근무 후 수석부장 및 법원장, 대법관 등 고위직에 보임
- 지법배석-지법단독-고법배석-지법부장-고법부장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보직이동의 정점에 있어 ‘법관인사의 꽃’ 이라고 불림

● 고법부장 선발제도의 문제점

- 인사권자가 사법행정권 확보를 위해 활용 가능 ⇨ 법관의 독립 약화 우려
- 승진을 염두에 둔 법관 스스로 관료적 행태를 조장하는 경우, 승진 탈락자 입장에서 자긍심이 훼손되거나 법관으로서의 윤리적 긴장감을 상실하는 경우 등 내부적 부작용 발생
- 고법부장 보임을 전후로 한 법관의 중도 사직으로 인한 고급 재판인력 상실 ⇨ 반복되는 ‘전관예우’ 논란 등 외부적 신뢰 저하

● 고법부장 선발제도의 폐지 및 이원화 제도의 시행

- 고법부장 보임을 정점으로 하는 법관의 단계적 보직 이동을 폐지 ⇨ 법원의 관료화 완화 및 법관의 독립 강화
- 충분한 경륜을 갖춘 법관들이 항소심 재판부 합의부를 구성 ⇨ 실질적인 대등 합의부 운영 가능
- 지법과 고법에 각각 자긍심을 가지고 재판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평생법관제의 정착 및 중견 법관의 중도 사직 감소

- 최근 고법판사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관 전체 퇴직자 수는 이원화 시행 이전보다 감소한 상태임

■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대비한 인사제도 구축

● 법조일원화 제도 하에 적절한 인력을 법관으로 선발하기 위한 토대 마련

- 기존의 피라미드형 승진제도, 잦은 인사발령과 보직 변화 시스템의 한계 봉착
⇒ 우수 법조경력자의 유치에 장애요소로 작용

● 잦은 인사발령과 보직 변화의 최소화

- 법관의 생활 안정성 및 법관의 독립 강화 ⇒ 우수 법조경력자의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

● 재판의 연속성, 효율성, 전문성 제고

- 잦은 전보인사를 지양함으로써 재판 지연 및 국민의 불편 개선

■ 이원화 제도의 긍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본 고법판사 제도의 문제점

구분	목표	문제점
재판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항소심 재판의 연속성, 효율성,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고법에서 지방권 고법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심리의 연속성, 효율성 저하 ⇒ <u>순환근무 개선책 마련 필요</u> · 지방권 고법은 배석자원의 부족 등으로 1년 근무 후 전보되는 고법배석 다수 발생 ⇒ <u>지방권 고법판사 지원 유인책 마련 필요</u>
	항소심 재판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등 합의부의 경우 업무량 부담으로 주심 단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 · 합의부장 경험 없이 곧바로 고법판사로 보임되는 경우 등으로 인한 고법의 재판역량 약화 우려



구분	목표	문제점
	중견 법관의 중도 사직 최소화	· 최근 5년간 고법판사의 중도 사직이 증가하는 경향 → <u>사직유인을 줄이고 근무의욕을 고취할 방안 마련 필요</u>
법관인사의 측면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부합	·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요건의 시행 유예 가능성 · 수도권 고법판사의 경우 선발적 성격이 강화되어 <u>단계적 보직이동으로 변질될 우려</u>
	지방법원 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근무의욕 고취	· 당초 이원화의 전제로 거론된 <u>원칙적 1심 단독화는 요원한 상황</u> · <u>지법부장 보임 기수에 맞추어 조기에 고법판사로 보임함</u> 으로써 지법의 재판역량 약화 우려
	잡은 대규모 전보인사의 폐해 완화	· 지방권 고법의 공식 충원을 위한 <u>순환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생활 안정성 저하</u> → <u>순환근무 개선책 마련 필요</u>
사법행정의 측면	법원의 관료화 완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의 축소	· 향후 고법판사 보임에 선발적 성격이 강화될 경우 <u>승진과 비슷하게 운영될 것</u> 이라는 우려

- ▣ 순환근무 개선책 및 지방권 고법 지원 유인책 등 인사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Ⅲ. 2024년 정책 변화에 따른 고법판사 제도 개선 방향

1. 개요

■ 2024. 1. 19. 법원행정처장 '2024년 법관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10여년 이상 시행되면서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수도권 고등법원은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된 상태임에도 지방 순환근무 명목의 수도권 고법판사 전보 인사 및 지법부장 보임 시기의 최초 3개 기수 수도권 고법판사 신규보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의 연속성과 생활의 안정성이 저해되는가 하면, 수도권 고법판사 신규보임이 마치 선발성 조기 발탁 인사인 것처럼 인식되어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업무적성을 고려한 적정한 인사와 고법·지법의 균형 잡힌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는 고법판사 조기 사직 및 지법판사 사기 저하로 이어져, 법관의 조기 퇴직 문제를 해소하고 1심과 항소심 법관의 전문성 제고 및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도입된 이원화 제도의 취지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수도권 고등법원 이원화가 완성 단계인 현실과 심급제도의 취지를 살려, 지방권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범위내의 지방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수도권 고등법원에서는 지법부장으로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들 중에서 신규 보임할 예정입니다.

- 수도권 고법판사에 대하여 지방권 고법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순환근무 실시 ⇨ **순환근무 축소**
- 수도권 고법판사는 지법부장으로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들 중에서 신규 보임 ⇨ **신규보임 기수 상향**

2. 순환근무 정책 변화 관련 검토

가. 종래 순환근무 실시 기준

1) 1차 순환근무

■ 공지사항

● 2016년 정기인사 관련 공지사항⁹⁾

첫째로, 고법판사의 전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법관 정기인사 때부터 고법판사의 타 고등법원 전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고법판사의 재판경험을 확대하고 전국 고등법원 재판의 균질한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고법판사의 인사이동을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일반의 인사이동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9) 2016년 정기인사에서 서울고 고법판사의 1차 순환근무가 처음 시작되는 점을 고려한 공지



고법판사의 타 고등법원 전보는 사법연수원 동기 초임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지방권 또는 권역 외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동기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는 첫 해에 고법판사로 보임된 법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1년 고법판사로 보임된 25기 고법판사부터 전보대상이 되어 타 고등법원에서 1년간 근무한 이후 원 소속 고등법원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23기, 24기 고법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1년 내지 2년 근무를 마친 이후에 고법판사로 보임되었으므로 전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7기 이하 고법판사들의 경우에는 동기 초임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지방권 근무기간이 일률적으로 2년으로 연장된 점을 고려하여 전보 대상 고법판사의 범위나 타 고등법원 근무기간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인사 이원화 시행 당시 공지한 대로 서울고등법원 소속 고법판사 뿐만 아니라 지방권 고등법원 소속 고법판사도 전보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보의 시점은 원칙적으로 고법판사로 5년의 근무를 마친 시기입니다. 따라서 2016년에는 2011년에 보임된 25기 고법판사가, 2017년에는 2012년에 보임된 26기 고법판사가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보 시점이 비교적 임박한 25기와 26기 고법판사에 대하여는, 2016년과 2017년 중 희망하는 시점을 가급적 존중하여 타 고등법원 전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희망이 특정 연도로 집중되는 등 인사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희망과 다르게 원칙적인 기준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는 소속 고등법원 이외의 고등법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지방권 고등법원 소속 고법판사의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과 소속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다만 소속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동일 권역 근무기간 7년 상한 원칙과 관련하여 향후 권역 외 전보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10)

지방권 고등법원의 고법판사 신규 보임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는 한 서울고등법원 근무 고법판사의 지방권 고등법원 전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기 이하의 경우에** 초임 지법부장들의 지방권 근무기간이 일률적으로 2년으로 연장된 점 등을 고려하여, 2019년 정기인사부터는 **동기가 지법부장으로 보임되는 두 번째 해에 고법판사로 보임된 법관도 지방권 고등법원 전보의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전보 이후 근무기간은 지방권 근무기간의 형평을 위하여 1년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만, 인사 여건이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지방권 고등법원의 고법판사 신규 보임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는 한 서울고등법원 근무 고법판사의 지방권 고등법원 전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권으로 전보된 고법판사의 근무기간은 동기인 지법부장의 지방권 근무기간과의 형평을 위하여, **동기가 지법부장으로 보임되는 첫 번째 해에 고법판사로 보임된 법관의 경우 2년, 두 번째 해에 보임된 경우 1년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사 여건이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무기간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 가능한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동기인 지법부장의 지방권 근무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32기 이하 고법판사의 경우 순환근무의 대상이 되는 범위나 기간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10) 2019년 정기인사에서 27기(지방권 근무기간 2년 연장)의 경우 지방권 근무 1년을 마친 경우라도 1차 순환근무를 처음 시행하게 되는 점을 고려한 공지



● ‘2021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서울고등법원 본원은 2019년 이후 이원화가 완성되었으나, 다른 고등법원은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원화가 조속히 완성되어 실질적 대등재판부가 전국적으로 균질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이원화의 완성이 시급한 지방법원 고등법원 소속 고법판사의 경우, 공석상황 및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만, 2021년 정기인사부터는 인사희망에 따라 가급적 순환근무(고법판사 5년 근무 후 실시하는 전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 ‘2023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지방법원 고등법원의 고법판사 신규 보임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는 한 서울고등법원 등 수도권 고등법원에서 5년의 근무를 마친 고법판사의 지방권 고등법원 전보(순환근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권으로 전보된 고법판사의 근무기간은 동기인 지법부장의 지방권 근무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32기 이하 고법판사의 경우 3년(고법판사 보임 전 지법부장으로 근무한 지방권 근무기간 등이 공제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나 이원화 진행 과정이나 인사 여건 등에 따라 향후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순환근무 목적

- 2016년 순환근무 최초 실시 당시에는 고법판사의 재판경험 확대와 전국 고등법원 재판의 균질한 발전 및 지법부장과의 균형 등이 제시됨
- 2019년 이후에는 주로 지방권 고법의 공석 충원을 위해 불가피함을 고려

■ 순환근무 시기

- 고법판사로 5년 근무한 시점에 일괄적 전보 원칙
 - 부득이한 사유 있는 경우에는 1년 정도 유예 가능 ⇨ 2018년 이후 유예 사례 없음

■ 순환근무 범위

- 수도권 고법판사의 지방권 전보, 지방권 고법판사의 타 고법 전보 함께 실시
 - 다만, 지방권 고법판사는 2021년 정기인사부터 미실시

■ 순환근무 기간

- 동기 지법부장들의 초임 지방권 근무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하되, 고법판사 보임 전 지법부장으로 지방권에 근무한 기간을 공제함 ⇨ 지법부장으로로서의 지방



권 근무를 마친 경우에는 1차 순환근무가 면제됨

구분	26기 이상	27~31기	32기 이하	특허
원칙적 순환근무 기간	1년(지법부장 1년차에 신규보임)	2년(지법부장 1년차에 신규보임) 1년(지법부장 2년차에 신규보임)	3년(공지 기준)	3년

■ 순환근무 실시 전례

정기인사	수도권 고법	지방법 고법
2016년	5명 (25기 4명, 26기 1명)	1명 (대구고 25기 1명)
2017년	8명 (25기 3명, 26기 4명, 27기 1명)	0명
2018년	10명 (26기 4명, 27기 6명)	2명 (대전고 25기 1명, 대구고 27기 1명)
2019년	13명 (27기 8명, 28기 5명)	2명 (부산고 26기 1명, 부산고 28기 1명)
2020년	13명 (28기 9명, 29기 4명)	0명
2021년	7명 (28기 1명, 29기 5명, 30기 1명)	0명
2022년	8명 (29기 1명, 30기 5명, 31기 2명)	0명
2023년	10명 (30기 2명, 31기 5명, 32기 3명)	0명
합 계	74명	5명

2) 2차 순환근무

■ 공지사향

● ‘2019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11)

종래의 인사원칙에 따를 경우 이번 정기인사부터 지방권 고등법원에 고법부장(재판장) 공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권 고등법원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고법부장으로 전부 충원되지 않는 경우 그 공석은 지방권 고등법원에 근무 중이거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전보되는 24기 이하 고법판사로 충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 중인 24기 이하 고법판사는 서울고등법원 근무기간, 기수, 연령 등을 두루 고려하여 순차로 지방권 고등법원으로 전보 후 2년간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 ‘2021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11) 2019년 정기인사에서 처음으로 24기 이하 고법판사의 2차 순환근무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한 공지



2018. 2. 신규 보임되어 지방권 고등법원에서 3년간 근무한 고법부장들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인사희망에 따라 수도권 고등법원(원외재판부 포함)으로 전보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7. 2. 신규 보임되어 지방권 고등법원 3년 근무를 마친 후 현재 경인권 고등법원에서 근무 중인 고법부장들은 인사희망에 따라 이번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될 예정입니다.

2019년 정기인사에서 지방권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고법부장 직무대리 형태로 전보되었던 24기, 25기 고법판사들은 인사희망에 따라 이번 정기인사에서 경인권 고등법원으로 전보될 예정이며, 전보 후 근무기간은 2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023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는 고법판사의 부족 등으로 지방권 고등법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판장 공석은 작년과 유사한 기준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 중인 고법판사 및 지방권 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석 충원을 위한 전보인사는 지방권 고등법원 고법판사의 경력이 장기화되고 신규 보임이 확대되는 등 이원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순환근무 목적 ▶ 지방권 고법 재판장 공석 충원 + 경인권 고법 공석 충원

● 고등법원 재판장 자격 = 법조경력 20년 + 고법판사 근무 경력 3년

법관인사규칙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③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

■ 순환근무 시기

- 1차 순환근무 후 3~4년이 지난 시점 또는 1차 순환근무 면제의 경우 7년 이상 근무 시점

■ 순환근무 범위

- 수도권 고법판사에 대하여 지방권 고법 재판장 공석 충원 범위 내에서 순환근무 실시
 - 다만, 경인권 고법 공석을 감안하여 지방권 고법 재판장 공석보다 많은 규모로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기도 함
 - 경인권(인천부, 수원고) 고법판사의 경우 순환근무 시기가 미달하여 실시 전례는 없음



- 2차 순환근무 순서는 수도권 고법 계속근무기간, 기수, 연령 등을 고려

■ 순환근무 기간

- 지방권 고법 2년(특허 3년) 근무, 경인권 고법 2년 근무(서울고 고법판사의 경우)를 거쳐 원 소속으로 복귀함

■ 순환근무 실시 전례

정기인사	서울고	비고
2019년 ¹²⁾	5명 (24기 3명, 25기 2명)	1차 순환 면제자
2020년	7명 (25기)	1차 순환 면제자
2021년 ¹³⁾	14명 (25기 6명, 26기 7명, 27기 1명)	25기는 1차 순환 후 3~4년 근무 26, 27기는 1차 순환 면제자
2022년	6명 (26기)	1차 순환 후 3~4년 근무
2023년	6명 (25기 1명, 26기 1명, 27기 4명)	1차 순환 후 3~4년 근무
합 계	38명	

나. 2024년 순환근무 기준 변경

1) 개요

- 종래 2차 순환근무자들이 담당하던 **지방권 고법 재판장 공석 충원의 역할을 1차 순환근무자들이 담당**하고 **2차 순환근무는 미실시**

2) 1차 순환근무 축소

- 순환근무의 목적 변경 ▷ 지방권 고법의 **재판장** 공석 충원
- 대상자(5년 근무)에 대한 **일괄적** 전보 원칙 ⇨ 대상자 중 지방권 고법의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축소
- 2024년 정기인사에서는 지방권(춘천부, 청주부, 울산부, 창원부, 광주고, 전주부) 재

12) 고법부장 미보임에 따른 공석 충원을 위하여 부득이 고법판사 중 일부에게 고법부장 직무대리 발령(2020년도 같음)

13) 고법부장 직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 직무대리 발령 대신 통상적인 전보 발령



판장 공석 충원을 위한 범위 내에서 수도권 고법판사 10명(서울고 31기 2명, 32기 5명, 33기 2명, 수원고 32기 1명)에 대하여 순환근무 실시

3) 2차 순환근무 폐지

- 1차 순환근무자들이 지방권 고법의 재판장 공석을 충원하면서 종래 2차 순환근무자들의 역할을 대신하게 됨 ⇨ 2차 순환근무 폐지
 - 2024년 정기인사에서는 2차 순환근무를 미실시하고, 지방권에서 2차 순환근무 중인 고법판사 일부는 경인권으로 진입하며, 경인권에서 2차 순환근무 중인 고법판사 일부는 서울고로 복귀
- 다만, 지방권으로의 2회차 순환근무를 미실시한다는 의미로, 추후 1차 순환근무자들이 소진되는 경우 여전히 2차 순환근무가 재실시될 여지는 있고, 특히 경인권 순환근무 실시 여부는 별도의 정책결정 필요

다. 2024년 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요소

■ 전국 단위 이원화 완성 목표의 수정 필요성

- 수도권 고법은 이원화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충분히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권 고법은 이원화 완성이 요원한 상황임을 고려
 - 2024년 정기인사 기준 지방권 고법판사 공석 121명 - 원소속 현원 60명 = 61명이 추가 보임되어야 지방권 이원화 완성 ☞ 이미 고법판사 희망 법관이 상당수 보임된 상태임을 고려하면 이원화 완성 불투명

■ 지방권 고법판사 현황

구분	춘천	대전고	청주	대구고	부산고	울산	창원	광주고	전주	제주	특히	합계
재판부 수	2	6	2	6	6	2	4	5	2	1	5	41
전체 현원	6	19	6	19	19	6	12	16	6	3	16	128
고법부장	0	1	0	1	3	0	0	1	0	0	0	6
고법판사 공석	6	18	6	18	15	6	12	15	6	3	16	121
고법판사 현원(원소속)	0	14	4	7	14	3	2	7	1	0	8	60



- 지방권 고법의 현실 인식 및 수용에 따른 정책 수립 필요 ☞ 전국 단위 이원화 완성의 이론적 도그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지방권 고법판사의 공식 충원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순환근무 실시 ☞ 전국 단위 이원화 완성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경우 순환근무의 필요성 약화

■ 순환근무로 인하여 누적된 부작용의 감소 기대

- 수도권 고법판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2회 이상의 순환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생활 안정성 저해 ☞ 수도권 고법판사의 사기 저하 및 사직 유인 우려
-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수도권 고법은 물론, 순환근무 대상인 지방권 고법의 심리 연속성 및 효율성 저해 ☞ 향소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 순환근무가 일시적·과도기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대됨이 불가피 ☞ 향후 수도권 고법판사의 신규보임 인원 감소로 1차 순환근무 대상자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결국 추가 순환근무 설계 필요
- 순환근무를 축소함으로써 고법판사의 생활 안정성 및 재판의 연속성·효율성 제고 가능성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에 기초한 정책 방향 확립

- 그동안 순환근무가 지속됨으로써 고법판사 제도 특유의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지적 ☞ 정책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순환근무 실시에 대한 수용도 역시 낮아지는 측면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은 법조일원화 시대에서의 사법 선진화 정책 방향에 부합하므로 유지·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임명 당시 법원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이른바 ‘부동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 단위의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 순환근무를 위해 수시로 담당 법관이 교체됨으로써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의 소송법상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지방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보주기 장기화도 같은 취지에서 이해 가능
- 고법판사 제도의 경우 법조일원화에 어울리는 이상적인 제도 구현의 일환으로 제도 도입 당시부터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 시행 ☞ 선진 사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유지 및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에 기초할 때 향후 순환근무는 **재판장 공석 충원과 같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함

■ 고등법원 권역별 탄력적 운영 가능

- 수도권 고법은 이원화 완성 단계에 따라 고법판사 제도 도입 당시의 목표에 따른 운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지방권 고법의 경우 고법판사 지원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영 방안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수도권 고법과 연계하지 않고 지방권 고법의 현실을 고려하여 영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가능

■ 고법배석의 활용 가능성 제고

- 이원화 완성이 어려운 지방권 고법의 현실을 인정하고 순환근무를 축소함으로써 당장 지방권 고법의 공석에 고법배석 보임 확대 필요
- 고법배석 보임도 다양한 순기능이 있으므로 지방권 고법판사가 보임되지 않는 경우 보완책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
- 법관인사 이원화 자체가 인사제도의 절대적인 목표는 아님 ☞ 지방권 고법의 이원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법원 전체의 재판역량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 가능



-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른 고법과 지법의 분리와 더불어 지법 항소부의 대등화 경향에 따라 지법판사의 경우 항소심 재판을 경험할 기회가 감소하는 부작용 ☞ 항소심 경험 없는 법관이 재판연구관으로서 상고심 업무를 담당하거나 고법 판사로 보임됨으로써 법원 전체의 재판역량이 약화되었다는 지적
- 고법배석을 통해 고등법원 항소심을 경험할 수 있는 지법판사가 증가하게 되면 법원 전체의 재판역량에 긍정적 역할 수행 기대
- 고법배석은 대도시 근무의 이점이 있으므로, 지방권 전보 지법판사 전원을 보임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운용 여하에 따라 낮은 선호도와 단기근무 문제는 해소될 여지가 충분함

2) 부정적 요소

■ 전국 고등법원 재판의 균질성 저하

- 고법판사의 재판역량을 유지하고 전국적으로 균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순환근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음
- 전국 단위의 순환근무를 통하여 고법판사의 재판경험 확대, 전국 고등법원 재판의 균질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시각
- 고등법원은 사실심의 최종심으로서 전국 법원의 재판실무와 법관의 능력이 가능한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음 ☞ 법원 간 교류가 단절되는 경우 재판 실무 등에 괴리가 발생할 우려
- 특히, 현 시점에서 순환근무를 축소하는 경우 수도권 고법에는 고법부장 또는 고법판사의 대등합의부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반면, 지방권 고법에는 대부분 고법판사와 고법배석(지법판사)으로 재판부가 구성되어 같은 심급임을 고려할 때 지나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

■ 고법배석 확대의 부작용 우려

- 지방권 위주로 고법배석 보임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고법과 재판부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지나친 격차가 발생



- 다수의 지법판사가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관을 고법판사와 지법판사로 분리하여 운용한다는 이원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 고법배석의 선호도가 매우 낮아 지방권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단독자원들이 희망과 무관하게 고법배석으로 전보되는 문제 ☞ 지법의 재판역량은 물론 지방권 인력수급에도 악영향
- 고등법원에서도 고법배석의 단기근무로 인하여 재판의 연속성, 효율성이 악화 되고 있다는 우려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에 대한 재검토 여지

- 고질적인 지방권 고법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을 전면 재검토하여 권역간 고법판사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당초에는 지방권 고법도 2018년경 이원화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까지도 지방권 고법 부족 현상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임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은 법관인사규칙 등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법관 인사 이원화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으므로, 재판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
 - 다만, 현실적으로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사운영과의 조화, 인력수급 예측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아래 라.항에서 상세 검토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 하에서도 얼마든지 순환근무가 가능함 ☞ 고법판사 제도 도입 당시에도 권역별 보임 및 근무를 전제로 하면서도 전국 단위의 전보 인사를 예정하였음

라.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의 개편 검토

1) 현행 고법판사 보임 및 근무 단위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



■ 개요

- 고법판사는 권역별로 보임되어 최초 보임된 고법 권역(원소속)에서 계속 근무함이 원칙 ⇨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타 고법 권역으로 원소속 변경(전적) 불가

- 고법판사 제도 도입 당시부터 일관된 원칙

- 2011년(고법판사 최초 보임) 정기인사 인사희망원 신청 안내문(현재까지 동일)

- 고법판사로 보임될 경우 근무를 희망하는 고등법원(특허법원은 제외)을 지명순서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고법판사는 고등법원 권역별로 보임되어 일정 기간의 권역 외 근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해당 권역에서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1지명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2지명은 그 권역의 고법판사로 보임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다만, 실제로는 권역별이 아닌 법원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 원외부에 보임된 고법판사도 원외부에서 계속 근무

- 2019년 인천부 신설 당시 공지사향(2018. 11. 5.)

4. 수원고등법원 등의 인사 운용

수원고등법원(5개 내외 재판부)과 수원가정법원이 2019. 3. 1.자로 개원될 예정이고,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1개 재판부)도 2019. 3. 1.자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서의 장기간 근무를 희망하는 고법부장, 고법판사의 인사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현재 고법부장, 고법판사 및 판사의 근무를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울산부 신설 당시 공지사향(2020. 10. 29.)

3. 울산 원외재판부의 설치

2020. 6. 1. 대법원규칙이 개정되어 2021. 3. 1.자로 울산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민사(가사), 형사, 행정재판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다른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법관 배치에 있어 울산 원외재판부에서의 장기간 근무를 희망하는 고법부장, 고법판사의 인사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 근거

- 법관인사규칙 등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법관인사 이원화의 도입취지에서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그보다 법관인사 이원화와 아울러 법조일원화에 어울리는 이상적인 제도 구현



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개편의 필요성

- 지방권 고법판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수도권 고법판사를 대상으로 지방권 고법으로의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것임
- 현행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 하에서는 순환근무 실시에 제약이 있음
 - 수도권 고법판사로서는 권역별로 보임되었음에도 지방권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관하여 다소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
 - 순환근무 실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고법판사를 과원 상태에서 계속 신규 보임하여야 함 ☞ 전체 고법판사 중 수도권 고법판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동시에 지방권 고법의 자체적인 이원화는 더욱 요원하게 됨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을 개편하여 신규보임 및 근무 단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하게 되어 지방권 고유의 고법판사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균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고려 가능
- 한편, 주로 지방권 원외부에 결원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보임 및 근무 단위를 고등법원 권역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그동안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이 실제로는 ‘법원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 본래 의미에 부합하도록 고등법원 ‘권역별’로 운영한다는 의미

2) 고등법원 단위로 확대(원외부 통합)하는 방안

■ 개요

- 서울고(인천부, 춘천부 포함), 수원고, 대전고(청주부 포함), 부산고(울산부, 창원부 포함), 광주고(전주부, 제주부 포함) 단위로 고법판사를 보임하여 동일 고등법원 권역 내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
- 원외부에도 고법판사 충원을 위한 순환근무가 지속적으로 실시 ⇨ 원외부 고법



판사 부족 해소

▣ 장·단점 검토

● (+) 본래 의미의 고등법원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에 부합

- 종래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은 ‘고등법원 권역별로 보임’ 된다는 공지와 달리 실제로는 법원별로 운용됨 ☞ 원외부에 보임된 고법판사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
- 종래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과 어느 정도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시행 가능하므로, 기존 고법판사에 대한 적용도 전향적으로 검토 가능

● (+) 원외부 고법판사의 부족 현상 해소

- 원외부의 경우 고법판사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하여 상시적으로 지법판사가 고법배석으로 근무 중임 ☞ 지법판사의 고법배석 근무 최소화

● (+) 수도권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부담 완화

- 권역별로 순환근무 실시함으로써 수도권 고법판사의 지방권 순환근무가 면제되는 결과
- 특히, 수원고의 경우 소속 원외부 없으므로 순환근무 전면 폐지
 - 다만, 지방권 고법판사 전체의 결원이 심화되는 경우 수도권 고법판사의 순환근무가 불가피할 수 있음

● (-)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이 더욱 저조해질 우려

- 지방권 이원화 속도가 매우 더딘 가운데 순환근무의 부담까지 더해지면 지원유인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
- 특히, 광주고와 전주부는 법원 건물 기준으로 이동거리 103km에 이르고 제주부는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 순환근무로 인한 생활 안정성 저해 정도가 큼

● (-) 기존 고법판사에 대한 인사운용과 조화 문제

- 기존 고법판사에게도 적용하는 경우 사실상 순환근무가 실시되지 않았던 지방



권 고법판사의 문제제기 또는 사기 저하 우려

- 기존 고법판사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수별, 보임시기별 형평 문제와 아울러 인사운용이 난잡해질 우려

- (-) 서울고의 경우 2024년 정기인사 기준에 반하는 문제

- 2024년 정기인사에서 지방권 순환근무는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실시하기로 공지하였음에도 지방권인 춘천부에 순환근무 확대 실시하게 되어 정책의 일관성 논란 여지

■ 검토의견 ▷ 소극

- 광주고에는 물리적인 거리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순환근무 실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전반적으로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이 저조한 가운데 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본래 의미의 고등법원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에 부합하는 타당한 방안으로 볼 수 있으나, 당장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권 이원화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곤란함 ⇨ 향후 지방권 이원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
- 시행이 용이한 고등법원(특히 서울고)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신규보임 단위는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적절 ⇨ 순환근무 개선방안에서 논의함이 바람직

3)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

■ 개요

- 고법판사를 전국 단위로 보임한 후 전국적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방안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의 폐지
- 기존 고법판사의 신뢰 및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기존 고법판사에게는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하므로, 신임 고법판사에게만 적용 검토



- 다만, 기존 고법판사에게도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방법원으로의 복귀 등 다른 선택권을 보장한 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해 보임 ☞ 기존 고법판사도 순환근무 실시하는 경우 신임 고법판사의 수도권 배치가 용이해짐

■ 수도권 전체 공석 수(147명)와 지방권 현재 공석 수(61명) 고려하여 단순 계산 시 장기적으로 근무기간의 30% 가량 지방권 근무 예상(수도권 7년 + 지방권 3년 등)

● 신임 고법판사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서울고 과원 상태 감안할 때 전국 단위로 고법판사 보임 후 우선적으로 지방권 고법에서 근무하다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방식 고려 가능

- ex) 매년 약 10~20명 보임하는 경우 인력수급 예측¹⁴⁾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공석
수도권 현원 ¹⁵⁾	173	163	153	143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퇴직	-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순환 근무 (전출)	-	-	-	-	-	-	-	-	-	10	10	10	
수도권 전입	-	-	-	4	10	10	10	10	10	20	20	20	
지방권 현원 ¹⁶⁾	60	82	104	125 →121	121	121	121	121	121	121	121	121	121
신규 보임	-	22	22	21	10	10	10	10	10	10	10	10	
순환 근무 (전입)	-	-	-	-	-	-	-	-	-	10	10	10	
수도권 전출	-	-	-	4	10	10	10	10	10	20	20	20	

■ 2025년 시행하는 경우 2027년에 지방권 이원화 완성과 동시에 일부 수도권 진입 가능 ⇨ 그 후부터는 수도권 퇴직자 수(연 10명)만큼 서울권 진입 가능 ⇨ 2033년

14) 고법판사 공석 유지되고 수도권 퇴직자 연 10명이라 가정

15) 2024년~2026년에는 퇴직자 제외 현원(원소속). 2027년에는 ‘퇴직자 제외 현원’ → ‘지방권에서 유입된 인원 포함 현원’. 2028년~2035년에는 퇴직, 순환근무(전출), 수도권 유입 모두 고려한 최종 현원

16) 2024년~2026년에는 신규보임자 포함 현원(원소속). 2027년에는 ‘신규보임자 포함 현원’ → ‘수도권에 진입한 인원 제외 현원’. 2028년~2035년에는 신규보임, 순환근무(전입), 수도권 진입 모두 고려한 최종 현원



경부터 수도권에서 지방권으로 순환근무 실시 필요(순환근무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신임 고법판사는 지방권에서 6년 이상 근무 필요)

- 가령, 2025년 보임자는 지방권 3년 → 수도권 5년(2028년 수도권 진입) → 지방권 2~3년(2033년 지방권 전보) → 수도권 5년(2035년 수도권 복귀) 등의 형태 상정 가능
- 수도권 퇴직자 규모가 커지는 경우 신임 고법판사의 수도권 진입 빨라지는 반면, 지방권 퇴직자 등으로 공식 발생하는 경우 수도권 진입 지체될 가능성

■ 장·단점 검토

- (+) 지방권 고법의 이원화를 조속히 완성하여 현행 고법판사 제도의 고질적 문제인 지방권 부족 현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음
 - 신임 고법판사 전원이 지방권 고법에 배치됨으로써 지방권 고법도 고등부장과 고법판사로만 구성할 수 있게 됨 ⇨ 지법판사의 고법배석 근무 불필요
- (+) ‘원소속 고등법원’의 개념이 사라지므로 고법판사의 순환근무에 대한 전 반적인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유연한 인사운용 가능
- (+) 신규보임 후 지방권 근무부터 시작 ⇨ 고법판사 지원에 있어서 희망과 적성을 고려하는 측면이 강화되고, 고법판사 보임 이후 단기 사직유인을 줄일 수 있음
- (+) 전국 단위의 순환근무를 실시함으로써 고법판사의 재판경험 확대, 전국 고등법원 재판의 균질한 발전 도모
-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은 현행 고법판사 제도를 대표하는 특성으로 고법판사를 지원하는 주요 동기가 되어 왔음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의 폐지는 고법판사 제도의 근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제도의 정착 및 지속 가능성에 관한 우려 존재
- (-) 고법판사 지원 자체가 감소할 우려
 - 주거지 근처 동일 법원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서울권·지방권 고법판사의 각 지원 유인이 모두 감소할 가능성



- (-) 기존 고법판사에 대한 인사운용과 조화 문제
 - 기존 고법판사와 사이에 기수별, 보임시기별 형평 문제 ⇨ 신임 고법판사의 상대적 박탈감
 - 원소속 고법판사와 전국 단위 고법판사가 혼재함으로써 새로운 과도기를 겪게 됨 ⇨ 인사운용이 지나치게 난잡해질 우려
- (-) 현재 지방법원이 겪고 있는 잦은 순환근무로 인한 폐해(업무의 효율성·연속성 감소, 생활 안정성 저하 등)가 고스란히 재현됨
 - 지방법원의 전보주기 장기화 정책 방향과 모순된다는 지적 가능

■ 검토의견 ▸ 소극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은 고법판사 제도 도입 당시부터 일관되게 시행되어 상당수 법관들에게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되고 있음 ☞ 전격적 폐지는 고법판사 제도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관 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함
- 기존 고법판사에게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신임 고법판사는 잦은 순환근무가 불가피하고 기존 고법판사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음 ☞ 고법판사의 지원 유인 상실 우려

마. 소결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의 강화 및 순환근무의 축소

■ 순환근무를 통한 전국 단위 이원화 완성 방안은 한계에 봉착

- 순환근무로 인한 부작용이 누적되어 고법판사의 사기 저하 및 사직 유인이 되고 있음
- 한정된 순환근무 자원을 고려할 때 순환근무로 지방권 고법의 공석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음
- 현재와 같이 수도권 고법판사를 과원 상태로 신규 보임하여 순환근무를 지속하는 경우 수도권 고법판사 비중이 높아지는 등 지방권 고법의 자체적인 이원화



에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음

- 지방법원 고법판사의 충원은 다양한 고법판사 지원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부작용이 적고 지속가능한 방안임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의 유지 및 강화 필요성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은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의 소송법상 원칙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법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유지 및 강화해나가는 것이 타당함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을 개편하는 경우 앞서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나치게 잦은 순환근무로 고법판사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거나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부작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임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을 강화하는 경우 전국 고등법원 재판의 균질성 우려가 있으나, 여전히 고등법원의 재판장은 일정 경력 이상의 고법판사로 보임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고법판사 제도 운영 경험상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앞으로는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의 취지에 따라 순환근무를 재판장 공석 충원과 같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함

3. 신규보임 정책 변화 관련 검토

가. 종래 신규보임 대상 기준

- 고법판사 제도 도입 당시부터 매년 3개 기수 보임

- 매년 지법부장 보임 시기의 최초 3개 기수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지원 기회 부여

- 2019년 정기인사부터 개방된 기수 보임

- 기수 상한은 25기 + 기수 하한은 지법부장 보임 시기 ☞ 다만, 수도권 고법의 경우에는 실제 3개 기수 범위 내에서 보임



나. 2024년 신규보임 기준 변경

● 수도권 고법판사

- 지법부장으로서 재판장 경험을 충분히 쌓은 법관들 중에서 희망과 적성, 자질과 품성 등을 고려하여 보임 ⇨ 최초 3개 기수(36~38기) 미보임

■ 서울고에 26기 1명, 27기 1명, 30기 3명, 수원고에 31기 1명, 33기 1명 보임

● 지방권 고법판사

- 최초 3개 기수(36~38기)에서도 보임

■ 고법판사 신규보임 현황

보임 연도	보임 기수	23기	24기	25기	26기	27기	28기	29기	30기	31기	32기	33기	34기	35기	36기	37기	38기	합계
2011	23~25기	6	6	8														20
2012	24~26기		5	9	10													24
2013	25~27기			4	10	10												24
2014	26~28기				6	9	8											23
2015	27~29기					4	13	6										23
2016	28~30기						3	8	2									13
2017	29~31기							4	8	2								14
2018	30~32기								11	12	7							30
2019	25~33기			1		1	1	2		9	13	13						40
2020	27~34기					1	1			1	2	11	16					32
2021	28~35기						1				1	3	9	14				28
2022	30~36기								1			1	2	7	12			23
2023	35~37기													4	15	8		27
2024	26~38기				1	1		1	4	1		1	1	1		1	4	16
고법판사 합계(B)		6	11	22	27	26	27	21	26	25	23	29	28	26	27	9	4	337
-대법관 임명				2														2
-고법부장 보임		3	5															8
-지방법원 복귀					1													1
-퇴직 등		3	3	4	8	14	10	6	6	9	8	11	5	4	1	1		93
고법판사 현원		0	3	16	18	12	17	15	10	16	15	18	23	22	26	8	4	233

■ 최근 3년간 권역별(원외부 포함) 신규보임 현황



구분 (기수)	2022년						2023년				2024년											
	30	33	34	35	36	계	35	36	37	계	26	27	29	30	31	33	34	35	36	37	38	계
서울고			1	4	3	8		12	6	18	1	1		3								5
수원고			1	3	4	8	1	1	1	3					1	1						2
대전고	1	1			1	3	1	2		3											2	2
대구고						0				0												0
부산고					3	3			1	1				1						1	1	3
광주고						0	1			1			1				1	1				3
특허					1	1	1			1											1	1
합계	1	1	2	7	12	23	4	15	8	27	1	1	1	4	1	1	1	1	0	1	4	16

다. 2024년 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요소

■ 최초 3개 기수 보임의 부작용 해소 필요성

● 최초 3개 기수에서 보임된 배경

- 이원화 제도의 최초 구상 당시 고법부장 선발제도의 폐단을 고려하여 일정 경력만 갖춘 경우 고법판사와 지법판사의 인사체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함 (2010. 3. 26.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건의문)

-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면 법관 임용 시부터 고법판사와 지법판사를 분리하기로 함

- 최초 3개 기수 특정 ⇨ 대상 기수에 해당하는 많은 법관들의 지원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이원화의 진행 및 조기 정착 목적

● 최초 3개 기수 보임의 부작용

- 수도권 고법판사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 발생
 - 초임 지법부장의 지방권 근무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당장 수도권 근무가 가능한 수도권 고법판사의 선호도 상승
 - 우수인력의 수도권 고법판사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도권 고법판사 보임이 사실상 선발이라는 인식의 확대 ⇨ 수도권 고법판사에 미보임된 지법부장의 사기 저하



- 고법과 지법 모두의 재판역량 약화

- 합의부 재판장 경험 없이 고법판사로 보임되는 경우 등으로 인한 고법의 재판역량 약화 + 조기에 지법부장에서 고법판사로 보임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법의 재판역량 약화

- 조기에 고법판사로 보임된 후 근무유인의 부족 문제

- 순환근무로 인한 부담과 결합하여 고법판사의 조기 사직유인으로 작용

- 법관의 조기 퇴직 문제를 해소하고 고법과 지법의 전문성 제고 및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도입된 이원화 제도의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 기수 상향의 필요성

● 최초 3개 기수 보임의 부작용 해소

- 고법판사 보임 기수를 상향함으로써 지법부장의 지방권 근무를 회피하기 위한 고법판사 지원이 사라지고, 지방권 근무를 마친 이후 적성에 따라 고법/지법을 선택 ⇨ 고법/지법 사이에 적정한 인적 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지법부장으로서의 재판장 경험이 충분한 고법판사를 신규 보임함으로써 고법의 재판역량 강화 + 고법/지법 사이의 적정한 인적 자원의 분배에 따른 지법의 재판역량 강화

● 이원화 완성을 전제로 한 신규보임 정책 필요

- 이원화 제도 시행 당시부터 이원화가 완성된 이후에는 기수를 개방하여 모든 지법부장을 대상으로 퇴직으로 발생한 공석만큼 고법판사를 보임할 것이 예정됨(2010. 9. 27. 인사총괄심의관 공지 ‘법관인사이원화방안’) ⇨ 신규보임 기수 상향이 충분히 예상되었음
- 서울고의 경우 이미 오래 전 이원화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권의 이원화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전국 단위 이원화 유지 또는 완성을 위한 과도기적 정책으로 서울고 고법판사의 지방권 순환근무를 실시함 ⇨ 순환근무를 실시할 상당한 규모의 고법판사를 계속 신규 보임하기 위해 매년 최초 3개 기수를 우



선 보임하는 방식을 취해왔음

- 앞으로는 순환근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줄어나갈 것이므로, 이행기 동안의 과도기적 정책이 아니라 이원화 완성을 전제로 한 신규보임 정책을 추진하여 신규보임 규모를 축소함과 아울러 보임 기수를 상향하는 것이 이원화의 진행 경과 및 현황에 부합함

-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축소에 따라 지방권 근무 측면에서 지법부장과의 차이가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 근무를 마친 지법부장을 고법판사로 보임하는 것이 지법부장과의 형평상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음

■ 고등법원 권역별 사정에 적합한 유연한 운영 가능

● 고등법원별 유연한 운영의 필요성

- 2024년 정기인사에서 지방권 고법판사는 여전히 최초 3개 기수에서 5명 보임되면서 수도권·지방권 고법판사 보임 기수에 편차 발생
- 지방권 고법은 수도권 고법과 달리 지원 저조 ➡ 지방권 고법의 이원화 활성화를 위하여 고법판사 신규보임 대상 기수 등을 달리 운영 필요
- 고등법원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한다는 방침 확인

2) 부정적 요소

■ 선발적 성격 강화 우려

● 신규보임 고법판사의 기수 및 법조경력 상향

- 2024년 신규보임 고법판사 중 법조경력 23년차 이상 7명
 - 28년차(26기) 1명, 27년차(27기) 1명, 25년차(29기) 1명, 24년차(30기) 3명, 23년차(31기) 1명

● 과거 고법부장 보임(법조경력 23~24년차 선발)과 유사하게 운영되어 선발적 성격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존재

- 지법부장까지의 경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고법판사로 선발된다는 인식이 생



길 수 있음

- 다만, 고법판사 제도는 희망과 적성에 따라 고등법원 법관과 지방법원 법관을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른 것으로서 고법부장 보임 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주요 보직 등 인사상 혜택을 독점하는 기존 고법부장 제도와 그 취지나 지위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반박 가능

- 선발적 성격 강화에 따른 단계적 보직이동의 부활 및 법원의 관료화 현상 재발 가능성

- 종래와 유사하게 지법배석 → 지법단독 → 지법부장 → 고법판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보직이동으로 변질될 우려

- 다만, 고법판사의 보임 대상기수가 특정되지 않고 개방된 기수에서 보임됨으로써 근기수간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수도권 고법의 이원화 완성으로 점차 보임 규모가 줄게 되면 종래와 같은 단계적 보직이동 내지 법원의 관료화 우려는 크지 않다는 반박 가능

■ 고등법원 재판의 균질성 저하

- 수도권·지방권 고법판사 보임 기수에 편차 발생 ⇨ 고등법원 재판의 균질성 저하에 관한 우려 상존

- 수도권 고법과 지방권 고법 사이에 재판부 구성 법관의 경력 차이 발생

- 다만, 이러한 결과는 지원현황에 따른 것일 뿐, 지방권 고법의 경우에도 수도권 고법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법조경력 있는 지법부장의 신규보임을 전혀 배제하지 않음
⇨ 향후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 활성화에 따라 상당한 경력을 갖춘 지법부장 보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고등법원의 고령화 우려

- 고법판사의 신규보임 기수가 상향됨에 따라 자연히 고등법원의 고령화 예상

- 신규보임 수도권 고법판사의 평균연령 2023년 42.0세 ⇨ 2024년 50.1세

- 고등법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고강도의 근무를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



준 고법판사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지적

- 재판연구원 증원만으로는 현실적 한계

■ 인사의 예측가능성 감소

- 신규보임 대상기수가 특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다소 감소
 - 개별 법관의 입장에서 고법판사로 보임 가능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법관으로서 중장기적인 진로 설정 곤란
- 특히, 향후 2~3년간 지방 근무를 마치는 기수에 대하여는 이미 상당수의 고법판사 보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규보임 대상기수에 관하여 적절한 선례가 형성되기 어려움 ☞ 신규보임 대상기수를 어느 정도 특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다만, 특정 시기에만 어떤 보직에 보임될 수 있고 그때가 지나가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방식은 선발적 성격 강화 및 쏠림현상 심화를 야기하여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반박 가능

라. 소결 ▸ 바람직한 이원화의 정착을 위한 신규보임 기수 상향

- 그동안 안정적인 이원화 진행 및 순환근무의 필요성에 기하여 지법부장 보임 시기의 최초 3개 기수가 고법판사에 보임되었으나, 수도권 고법판사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법부장의 사기 저하, 고법판사의 근무유인 부족, 고법과 지법의 재판역량 약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남
- 수도권 고법의 경우 앞으로 순환근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줄어나갈 것이므로 이원화 완성을 전제로 하여 신규보임 기수를 상향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최초 3개 기수 보임의 부작용도 해소할 수 있음
- 희망과 적성에 따라 고등법원 법관과 지방법원 법관을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에 따른 적절한 신규보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법판사의 선발적 성격 강화 등의 우려 역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음
- 한편, 고등법원 재판의 전국적인 균질성 저하 문제는 신규보임 정책의 변화 때



문이 아니라 지방권 고법의 고법판사 지원이 저조하기 때문임 ⇨ 지방권 고법의 고법판사 지원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

- 고등법원의 고령화 우려나 인사의 예측가능성 감소 등의 우려는 최초 3개 기수 보임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 취지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신규보임 시행 과정에서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충분한 고려 필요

IV. 2024년 정책 변화에 따른 고법판사 제도 개선 세부방안

1. 개요

가. 정책 변화 요지

■ 1차 순환근무의 축소

● 종래 기준

- 수도권 고법판사로 5년 근무 후 **일률적으로** 지방권 고법에 1차 순환근무 실시

● 변경된 기준

- 수도권 고법판사로 5년 근무 후 지방권 고법의 재판장 공석 충원을 위한 범위 내에서 1차 순환근무 실시

■ 2차 순환근무의 폐지

● 종래 기준

- 1차 순환근무 후 3~4년이 지난 시점에 지방권 고법의 재판장 공석 충원을 위한 범위 내에서 지방권 고법 및 경인권 고법에 2차 순환근무 실시

● 변경된 기준

- 2차 순환근무 미실시
 - 1차 순환근무자들이 지방권 고법의 재판장 공석 충원 역할을 함으로써 2차 순환근무 불필요하게 됨
 - 다만, 추후 1차 순환근무자들이 소진되는 경우 2차 순환근무의 재실시가 불가피하고, 특히 경인권 순환근무 실시 여부는 별도의 정책결정 필요

■ 신규보임 기수 상향

● 종래 기준

- 매년 지법부장 보임 시기의 **최초 3개** 기수 보임



- 변경된 기준

- 수도권 고법판사의 경우 최초 3개 기수 미보임

- 통상 지법부장으로서의 지방권 근무를 마친 후에 고법판사로 보임될 것으로 전망

나. 순환근무 관련 세부방안 검토 필요성

-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권 고법 및 경인권 고법의 인력수급 사정을 예측해보고, 이를 토대로 순환근무 대상자, 순환근무 기간 등의 세부적 정책결정 필요

2. 지방권 순환근무 관련 검토

가. 개요

- 순환근무 축소 정책으로 인하여 1차 순환근무 실시 소요 자체는 감소하게 됨
 - 일률적 실시 ⇨ 재판장 공식 충원 범위 내에서 실시
- 한편, 수도권 고법판사의 신규보임 기수가 상향되면서 1차 순환근무 대상자 역시 감소하게 됨
 - 2024년 이후 보임된 고법판사는 지법부장으로서의 지방권 근무를 마친 상태이므로 고법판사 보임 전 지방권 근무기간(2~3년)이 공제되어 1차 순환근무가 면제됨 ⇨ 2023년까지 보임된 고법판사로 1차 순환근무 대상자가 한정됨
- 향후 1차 순환근무 가능 기간을 예측해보고, 이를 토대로 1차 순환근무 대상자, 순환근무 기간 등의 정책결정 검토 필요

나. 1차 순환근무 지속 가능 기간 예측

- 2024년 순환근무 기준이 유지됨을 전제로 함
 - 순환근무 대상: 수도권 고법판사(인천부, 수원고 포함)로 5년 이상 근무
 - 순환근무 범위: 지방권 고법의 재판장 공식 충원에 필요한 범위



- 순환근무 기간: 원칙적 순환근무 기간 - 고법판사 보임 전 지방권 근무기간
 - 원칙적 순환근무 기간: 종래와 같이 동기 지법부장(32기 이하: 3년)과 같은 것으로 가정함

■ 순환근무 대상 ⇨ 향후 **1차 순환근무 대상** 인원 예상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임된 수도권 고법판사
 - 서울고 51명 + 인천부 2명 + 수원고 18명 ⇨ **합계 71명**
- 2024년 이후 보임된 수도권 고법판사는 지방권 근무를 마친 상태이므로 1차 순환근무 면제

■ 순환근무 기간 ⇨ **실제 순환근무 기간** 예상

- 3년에서 고법판사 보임 전 지방권 근무기간 등 공제하고 남은 기간 산정
 - 남은 기간 1년 3명, 2년 34명, 3년 34명 ⇨ 평균 약 2.43년¹⁷⁾

■ 순환근무 범위 ⇨ 향후 **지방권 고법 재판장 공석** 예상

- 2027년부터 춘천부(2명), 창원부(2명), 전주부(1명), 제주부(1명)를 제외한 나머지 고법에 재판장 전원 충원 ⇨ 장기적으로 **공석 6명** 발생 예상

■ **1차 순환근무 지속 가능 기간** 예측

- 예측을 위한 고려사항
 - 매년 충원 필요 인원 평균 ⇨ 약 2.46명(= 공석 6명 ÷ 1명당 순환근무 기간 2.43년)
 - 예상 퇴직자 규모(최근 5년간 수도권 연평균 퇴직자 약 10명)에 따른 예측 필요
- 퇴직자 규모별 순환근무 지속 가능 기간 예측

퇴직자 수 (연평균)	순환근무 가능 기간	산식
10명	5.69년	71명 ÷ 12.46명(퇴직자 10명 + 순환근무 2.46명) = 5.69년

17) [(1년 × 3명) + (2년 × 34명) + (3년 × 34명)] ÷ 총 71명,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퇴직자 수 (연평균)	순환근무 가능 기간	산식
7명	7.50년	$71명 \div 9.46명(퇴직자 7명 + 순환근무 2.46명) = 7.50년$
5명	9.51년	$71명 \div 7.46명(퇴직자 5명 + 순환근무 2.46명) = 9.51년$
3명	13.00년	$71명 \div 5.46명(퇴직자 3명 + 순환근무 2.46명) = 13.00년$

- 대략 5년~13년 내에 1차 순환근무 대상자 소진 ☞ 그 후 2차 순환근무 재실시 불가피

나-1. 2차 순환근무 재실시 관련 검토

■ 2차 순환근무 재실시 가부 및 시기

- 종래 기준 유지될 경우 2030년~2038년 사이에 2차 순환근무 재실시 예상
 - 2차 순환근무는 2024년 순환근무 축소 정책으로 미 실시하게 되었으나, 재판장 공식 충원에 필요한 이상 재실시가 불가피함

■ 2차 순환근무 대상

- 기존 2차 순환근무 대상자들에 대하여 유예된 2차 순환근무를 재실시하는 방안이 종래 순환근무 정책과 연속성이 있어 간명하고 수용 가능성도 높음
 - 향후 2차 순환근무 대상자: 서울고 110명(2014년 이후 보임), 인천부 2명(전원), 수원고 25명(전원)
 - 다만, 2차 순환근무 대상자의 기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2차 순환근무 실시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하기 곤란할 수 있음
 - 가령, 당초 2차 순환근무 대상자였던 28기의 경우 2030년~2038년에 법조경력 32년차~40년차에 해당함 ☞ 28기 지법부장의 경우 법조경력 27년차~28년차인 2025년~2026년에 2차 순환근무 실시 예정인 점과 비교
- 만일 경인권 고법에 순환근무 실시하는 경우 2차 순환근무와 수도권 내 순환근무 사이의 관계 및 기준 설정이 필요함

■ 2024년 이후 보임된 고법판사의 2차 순환근무 실시 시기 예측



● 2023년까지 보임된 고법판사의 2차 순환근무 기간 예측

■ 순환근무 대상 ⇨ 서울고 105명, 인천부 2명, 수원고 23명 합계 130명

■ 순환근무 범위 ⇨ 장기적으로 공석 6명 발생 예상

■ 순환근무 기간 예측

- 매년 충원 필요 인원 평균 ⇨ 3명(= 공석 6명 ÷ 1명당 순환근무 기간 2년)
- 퇴직자 규모별 순환근무 기간

퇴직자 수 (연평균)	순환근무 기간	산식
10명	5.62년	[130명 - (퇴직자 10명 × 1차 순환근무 기간 5.69년)] ÷ 13명(퇴직자 10명 + 순환근무 3명) = 5.62년
7명	7.75년	[130명 - (퇴직자 7명 × 1차 순환근무 기간 7.50년)] ÷ 10명(퇴직자 7명 + 순환근무 3명) = 7.75년
5명	10.30년	[130명 - (퇴직자 5명 × 1차 순환근무 기간 9.51년)] ÷ 8명(퇴직자 5명 + 순환근무 3명) = 10.30년
3명	15.16년	[130명 - (퇴직자 3명 × 1차 순환근무 기간 13.00년)] ÷ 6명(퇴직자 3명 + 순환근무 3명) = 15.16년

● 2차 순환근무가 재실시되고 대략 5년~15년 후(2035년~2053년) 2024년 이후 보임된 고법판사의 2차 순환근무 실시 예상

- 다만, 종래에는 대체로 기수, 보임연도 등을 고려하여 2차 순환근무를 실시하였으나, 순환근무를 가급적 축소하기로 하는 2024년 정책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1차 순환근무가 면제된 2024년 이후 보임 고법판사들이 1차 순환근무를 마친 고법판사들에 비해 2차 순환근무가 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

다. 검토방안

■ 개괄

- 향후에도 일정한 규모의 1차 순환근무 실시가 불가피한 가운데 1차 순환근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조기 소진 및 2차 순환근무 재실시 가능성이 있음 ☞ 1차 순환근무 기간 및 대상의 변경 등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순환근무 기간 관련 검토
 - ① 원칙적 순환근무 기간을 3년으로 유지하는 방안



- ② 원칙적 순환근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 ③ 순환근무 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는 방안(지법부장으로 지방권에 근무한 기간을 공제하지 않는 방안)

● 순환근무 대상 관련 검토

- 순환근무 대상에서 경인권(인천부, 수원고) 고법판사를 제외하는 방안

● 지방권 고법 재판장 외 나머지 공석 충원 방안

- ① 지법부장의 경향교류 시 지방권 고법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
- ② 고등법원 권역 내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방안

■ 순환근무 기간 관련 검토

① 원칙적 순환근무 기간을 3년으로 유지하는 방안

● 개요

- 수도권 고법판사의 원칙적 순환근무 기간을 동기 지법부장과 같이 3년으로 정하되 고법판사 보임 전 지법부장으로 지방권에 근무한 기간을 공제하여 고법/지법의 1차 지방권 근무기간을 일치시키는 방안

■ 1차 순환근무 지속 가능 기간 5년~13년

● 장·단점 검토

- (+) 전례에 따른 것으로 고법/지법별, 기수별 형평 저해의 소지가 가장 적음
 - 지방권 근무기간은 법관들 사이에 매우 민감한 문제 ⇨ 적어도 동기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사기 저하 또는 상대적 박탈감 발생을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제도 운용 가능
- (+) 1차 순환근무 자원이 한정된 가운데 원칙적 순환근무 기간을 장기간으로 유지하여 1차 순환근무 지속 가능 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지방권 고법에서 최대 3년까지 근무하여 충분한 사무분담기간 확보 가능 ⇨ 재판의 연속성·효율성에 긍정적 효과



■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

2. 고등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가. 고등법원장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관의 사무분담을 확정하는 경우 고등법원 판사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고등법원 판사 개인이나 법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사, 가사, 행정 합의부: 3년

2) 형사 합의부: 2년

- (-) 32기 이하부터 1차 순환근무 기간이 장기화함으로써 고법판사의 생활 안정성 저하

■ 장기화된 순환근무 기간이 사직유인으로 작용할 우려

- (-) 한편으로 고법판사 보임 전 지방권 근무기간을 공제함으로써 2024년부터 보임된 수도권 고법판사 전원이 1차 순환근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 2030년~2038년 사이에 기존 1차 순환근무 대상자들 모두 소진되어 2차 순환근무 재실시 불가피

■ 2차 순환근무가 재실시되는 경우 고법판사의 생활 안정성 보장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하는 2024년 정책 변화가 무색해짐

② 원칙적 순환근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 개요

- 수도권 고법판사의 원칙적 순환근무 기간을 동기 지법부장과 달리 2년으로 단축하고 고법판사 보임 전 지법부장으로 지방권에 근무한 기간을 공제하는 방안

■ 1차 순환근무 지속 가능 기간 4년~10년

■ 순환근무 대상 ⇨ 지법부장으로 지방권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제외

- 서울고 49명 + 인천부 2명 + 수원고 17명 ⇨ 합계 68명(2019년~2023년 보임)

■ 순환근무 기간 ⇨ 2년에서 고법판사 보임 전 지방권 근무기간 공제하고 남은 기간

- 남은 기간 1년 34명, 2년 34명 ⇨ 평균 약 1.50년¹⁸⁾

■ 순환근무 범위 ⇨ 장기적으로 공석 6명 발생 예상

18) [(1년 × 34명) + (2년 × 34명)] ÷ 총 68명



■ 1차 순환근무 가능 기간 예측

- 매년 충원 필요 인원 평균 \Rightarrow 약 4명(= 공석 6명 \div 1명당 순환근무 기간 1.50년)
- 퇴직자 규모별 순환근무 기간 \Rightarrow 4년~10년

퇴직자 수 (연평균)	순환근무 가능 기간	산식
10명	4.85년	$68\text{명} \div 14\text{명}(\text{퇴직자 } 10\text{명} + \text{순환근무 } 4\text{명}) = 4.85\text{년}$
7명	6.18년	$68\text{명} \div 11\text{명}(\text{퇴직자 } 7\text{명} + \text{순환근무 } 4\text{명}) = 6.18\text{년}$
5명	7.55년	$68\text{명} \div 9\text{명}(\text{퇴직자 } 5\text{명} + \text{순환근무 } 4\text{명}) = 7.55\text{년}$
3명	9.71년	$68\text{명} \div 7\text{명}(\text{퇴직자 } 3\text{명} + \text{순환근무 } 4\text{명}) = 9.71\text{년}$

● 장·단점 검토

- (+) 32기 이하 고법판사의 지방권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원화 진행 과정이 나 인사 여건 등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고 안내 \Rightarrow 2024년 순환근무 축소 정책으로 1차 순환근무 필요 인원이 줄어들게 되어 순환근무 기간 단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
 - 32기 이하는 2023년부터 1차 순환근무를 시작하여 아직 3년 근무 사례가 없으므로, 기수별 형평 고려하면 2025년이 순환근무 기간 조정의 적기이기도 함
- (+) 순환근무 기간을 3년으로 유지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순환근무 가능 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차이에 불과함 \Rightarrow 그 사이에 지방권 고법의 이원화가 완성되지 않는 한 어차피 2차 순환근무의 재실시가 불가피하므로 1차 순환근무 기간을 3년으로 유지할 실익이 적음
 - 향후 지방권 원외부에 고법판사가 신규보임되어 재판장 공석이 감소하거나 수도권 퇴직자가 감소하는 등으로 순환근무 가능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음
- (+) 순환근무 부담은 고법판사의 사직 고려 사유 1순위로, 순환근무 기간이 그 부담의 주요 요인임 \Rightarrow 순환근무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고법판사의 사기 진작 및 중도 사직 감소 기대
 - 최소한의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하는 2024년 정책결정 취지에도 부합
- (-) 순환근무 기간이 단축되면 순환근무 필요 인원이 늘어나게 되므로 순환근무



자원이 한정된 가운데 조기 소진 우려

- 최악의 경우 4년 후 1차 순환근무 대상자가 소진되어 예상보다 조기에 2차 순환근무 현실화 우려
- 지방권 재판장이 퇴직하는 등으로 추가 공석 발생하는 경우 2차 순환근무 재 실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 32기 이하 지법부장과의 형평 문제
 - 32기 이하 지법부장의 경우 현재 지방권 3년, 경인권 3년 근무 후 서울권 복귀 가능
 - 지법부장 동기와의 형평 문제는 이원화 취지상 반드시 고려할 요소는 아니나, 그동안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기간을 정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어 왔음
- (-) 지방권 1~2년 근무는 고법판사의 민사, 가사, 행정 사무분담기간(3년)과 일치하지 않음 ⇨ 재판의 연속성·효율성 저해 우려가 있고 사무분담 장기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비판 가능
 - 특히, 지방권 1년 근무 예정자 34명

③ 순환근무 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는 방안

● 개요

- 고법판사 보임 전 지법부장으로 지방권에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1차 순환근무 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하는 방안 ⇨ 고법판사 고유의 순환근무 기간 설정
- 종래 기준상 1차 순환근무 면제자(2024년부터 지방권 근무를 마치고 보임된 고법판사)도 순환근무 실시
 - 2024년 이전 보임된 고법판사 중 1차 순환근무 면제자(현재 29기~31기 합계 약 9명)의 경우 이미 1차 순환근무가 면제됨을 전제로 32기에 대한 순환근무가 실시된 점, 이를 반복하고 다시 1차 순환근무 실시 시기 등을 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단 순환근무 대상에서 제외함
- 현재 1차 순환근무 중인 고법판사부터 적용하는 방안 또는 2024년 보임된 고법



판사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 상정 가능

● 1차 순환근무 지속 가능 기간 예측

- 현재 1차 순환근무 중인 고법판사부터 적용하는 경우 ⇨ 1차 순환근무 계속 가능

■ 순환근무 대상

- 2019년~2023년 보임 합계 71명(서울고 51명, 인천부 2명, 수원고 18명)
- 2024년 보임 7명(서울고 5명, 수원고 2명)
- 2025년부터 보임되는 수도권 고법판사 전원

■ 순환근무 범위 ⇨ 장기적으로 공석 6명 발생 예상

■ 2019년~2023년 보임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가능 기간

- 매년 충원 필요 인원 평균 ⇨ 3명(= 공석 6명 ÷ 1명당 순환근무 기간 2년)
- 2019년~2023년 보임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가능 기간 ⇨ 5년~12년

퇴직자 수 (연평균)	순환근무 가능 기간	산식
10명	5.46년	71명 ÷ 13명(퇴직자 10명 + 순환근무 3명) = 5.46년
7명	7.10년	71명 ÷ 10명(퇴직자 7명 + 순환근무 3명) = 7.10년
5명	8.87년	71명 ÷ 8명(퇴직자 5명 + 순환근무 3명) = 8.87년
3명	11.83년	71명 ÷ 6명(퇴직자 3명 + 순환근무 3명) = 11.83년

■ 2024년부터 보임된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가능 기간

- 2024년 보임 고법판사는 5년~12년 후 순환근무 실시
- 2025년 이후 매년 고법판사 3명 이상 보임되는 경우 1차 순환근무 계속 가능

- 2024년 보임된 고법판사부터 적용하는 경우 ⇨ 1차 순환근무 계속 가능

■ 순환근무 대상

- 2024년 보임 7명(서울고 5명, 수원고 2명)
- 2025년부터 보임되는 수도권 고법판사 전원

■ 순환근무 범위 ⇨ 장기적으로 공석 6명 발생 예상

■ 2019년~2023년 보임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가능 기간

- 원칙적 순환근무 기간을 3년으로 가정함
- 매년 충원 필요 인원 평균 ⇨ 2.46명(= 공석 6명 ÷ 1명당 순환근무 기간 2.43년)
- 순환근무 가능 기간 5년~13년



퇴직자 수 (연평균)	순환근무 가능 기간	산식
10명	5.69년	$71명 \div 12.46명(퇴직자 10명 + 순환근무 2.46명) = 5.69년$
7명	7.50년	$71명 \div 9.46명(퇴직자 7명 + 순환근무 2.46명) = 7.50년$
5명	9.51년	$71명 \div 7.46명(퇴직자 5명 + 순환근무 2.46명) = 9.51년$
3명	13.00년	$71명 \div 5.46명(퇴직자 3명 + 순환근무 2.46명) = 13.00년$

■ 2024년부터 보임된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가능 기간

- 2024년 보임 고법판사는 5년~13년 후 순환근무 실시
- 2025년 이후 매년 고법판사 3명 이상 보임되는 경우 1차 순환근무 계속 가능

- 향후 퇴직 규모에 상응하여 3명 이상의 신규보임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경우 모두 1차 순환근무 계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두 경우 사이에 2024년 보임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실시 시기는 약 1년 차이에 불과함

● 2024년 이후 보임된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실시 시기 차이

- 종래 기준에 의할 때, 2024년 이후 보임된 고법판사는 2-1)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차 순환근무 대상자가 전부 소진되고(5년~13년) 그로부터 2차 순환근무 순서에 따라 5년~15년 후(2035년~2053년) 2차 순환근무 실시 예상
- 순환근무 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는 경우, 2024년 이후 보임된 고법판사는 1차 순환근무 순서(근무기간순)에 따라 5년~13년 후(2030년~2038년) 순환근무 실시 예상 ⇨ 5년~13년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 있음
- 다만, 종래 기준에 의하더라도 순환근무를 가급적 축소하기로 하는 2024년 정책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1차 순환근무가 면제된 2024년 이후 보임 고법판사들이 1차 순환근무를 마친 고법판사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2차 순환근무 실시 가능 ⇨ 이 경우 2024년 이후 보임된 고법판사들의 순환근무 실시 시기(2030년~2038년 예상)에는 큰 차이가 없음

● 장·단점 검토

- (+) 2024년 이후 보임된 고법판사를 대상으로도 1차 순환근무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1차 순환근무 대상 확대 ⇨ 2차 순환근무 재실시 방지

- 2차 순환근무가 재실시되는 경우 1차 순환근무를 마친 고법판사들이 재차 순환근무를 실시하여야 함 ⇨ 2차 순환근무를 폐지하기로 하는 2024년 정책결정 취지에 비추어 순환근무 재실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 2024년 이후 보임된 고법판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방권 순환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임 ⇨ 1차 순환근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1차 순환근무가 면제되더라도 5년~13년 후에 2차 순환근무 실시가 예상되고, 1차 순환근무 면제자의 경우 1차 순환근무를 마친 고법판사에 비해 우선적으로 2차 순환근무 대상이 될 수 있음
- (+)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고법판사의 지방권 근무기간 산정에 있어서 지법부장으로서의 지방권 근무기간을 공제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음
 - 고법판사로서의 지방권 근무는 사무분담, 재판부 구성 등 재판 경험의 측면에서 지법부장으로서의 지방권 근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특히, 2024년 이후 보임된 고법판사는 전원이 지법부장으로서의 지방권 근무를 마쳤을 것이므로 고법판사 고유의 순환근무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큼
- (+) 지방권 근무기간이 통일되어 간명한 인사운용이 가능하고 특히 2년 미만 단기 전보 방지
 - 지법부장으로서의 지방권 근무기간을 공제하는 경우 지방권 1년 근무 고법판사 3명(원칙적 지방권 근무기간: 3년) 또는 34명(원칙적 지방권 근무기간: 2년) 예상
- (-) 법관별로 부장 보임 후 지방권 근무기간에 최대 3년 차이 발생하여 형평성 논란 우려
 - 지법부장으로서의 지방권 근무(2~3년) 후 고법판사에 보임되어 지방권 근무(2년) 마치는 경우 총 지방권 근무기간 4~5년 > 지법부장 보임과 동시에 고법판사 보임되어 지방권 근무(2년) 마치는 경우 총 지방권 근무기간 2년
 - 지법부장 보임과 동시에 고법판사에 보임된 32기 이하 법관 34명은 순환근무 기간



이 사실상 단축(3년→2년)되는 반면, 2024년 이후 보임된 고법판사는 이미 2~3년간 지방권 근무를 마쳤음에도 또다시 지방권 순환근무를 해야 함

- (-) 지법부장으로 일정 기간 지방권 근무를 한 후 고법판사로 보임되어 순환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고법판사들의 신뢰 저해 가능성

■ 2023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지방권으로 전보된 고법판사의 근무기간은 동기인 지법부장의 지방권 근무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32기 이하 고법판사의 경우 3년(고법판사 보임 전 지법부장으로 근무한 지방권 근무기간 등이 공제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나 이원화 진행 과정이나 인사 여건 등에 따라 향후 단축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고법판사의 지방권 근무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지법부장으로 지방권에 근무한 기간을 공제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2024년 보임된 고법판사는 순환근무 시기가 종래 기준에 비하여 5년~13년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 있음 ⇔ 다만, 종래 기준에 의하더라도 2024년 정책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순환근무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음

※ 검토의견 ▸ [3] 순환근무 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는 방안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순환근무를 최소화하여 고법판사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사직유인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고법/지법 내 모든 부장의 1차 지방권 근무기간을 기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식의 형평은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함
- 2차 순환근무를 폐지하기로 하는 2024년 정책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1차 순환근무 대상을 2024년 이후 보임된 고법판사에게까지 확대하여 2차 순환근무가 재실시되는 결과를 최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지방권에 2년 미만의 단기 전보를 방지함으로써 최소한의 사무분담기간은 확보할 수 있음
 - ①, ②안과 같이 지법부장으로서의 지방권 근무기간을 공제하는 경우 일부 고법판사는 지방권에 1년만 근무하게 됨
- 2024년 이후 보임된 고법판사는 어떤 형태로든 지방권 순환근무가 예정되어 있



으므로 1차 순환근무를 실시하더라도 순환근무 시기가 다소 앞당겨지는 것에 불과함

● 한편, 구체적인 시행 시기 또는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 1차 순환근무 중인 고법 판사부터 곧바로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임

- 현재 1차 순환근무 중인 고법판사부터는 대부분 지방권에서 2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시행에 따른 특별한 불이익 없음
- 다만, 종래 기준에 의할 때 1년간 1차 순환근무 예정이었던 고법판사 등의 경우 신뢰를 고려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순환근무 대상 관련 검토** ▸ 순환근무 대상에서 경인권(인천부, 수원고) 고법 판사를 제외하는 방안

● 개요

- 경인권 고법(인천부, 수원고)의 경우 아직 이원화가 완성되지 않아 소속 고법판사 현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지방권 순환근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 그동안 수원고 고법판사를 중심으로 제시 또는 건의되어 왔던 사항임

■ 2022. 5. 수원고 고법판사TF 보고서 중

수원고법을 특별한 근거 없이 같은 권역 내인 서울고법과의 인사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방권 고등법원 과반 교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함

■ 2024. 4. 대법원장님 격려방문 건의사항 중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인사 시 권역 제한 관련]

수원고법 소속 고법판사들의 서울고법으로의 인사교류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지방권 고법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방전보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천부, 수원고 순환근무 대상: 인천부 2명, 수원고 18명

● 1차 순환근무 지속 가능 기간 예측

- ① 원칙적 순환근무 기간을 3년으로 유지하는 경우 ⇨ 4년~10년(기존 예측 대



비 1~3년 감소)

■ 순환근무 대상 ⇨ 서울고 51명

■ 순환근무 기간 ⇨ 평균 약 2.43년¹⁹⁾

- 남은 기간 1년 2명(지법부장으로 지방 실근무 2년)
- 남은 기간 2년 25명(지법부장으로 지방 실근무 1년)
- 남은 기간 3년 24명(지법부장으로 지방 실근무 없음)

■ 순환근무 범위 ⇨ 장기적으로 공석 6명 발생 예상

■ 1차 순환근무 가능 기간 예측 ⇨ 4년~10년

- 매년 충원 필요 인원 평균 ⇨ 약 2.46명(= 공석 6명 ÷ 1명당 순환근무 기간 2.43년)
- 퇴직자 규모별 순환근무 가능 기간 ⇨ 4년~10년

퇴직자 수 (연평균)	순환근무 가능 기간	산식
10명	4.09년	51명 ÷ 12.46명(퇴직자 10명 + 순환근무 2.46명) = 4.09년
7명	5.39년	51명 ÷ 9.46명(퇴직자 7명 + 순환근무 2.46명) = 5.39년
5명	6.83년	51명 ÷ 7.46명(퇴직자 5명 + 순환근무 2.46명) = 6.83년
3명	9.34년	51명 ÷ 5.46명(퇴직자 3명 + 순환근무 2.46명) = 9.34년

- ② 원칙적 순환근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 3년~7년(기존 예측 대비 1~3년 감소)

■ 순환근무 대상 ⇨ 서울고 49명

■ 순환근무 기간 ⇨ 평균 약 1.48년²⁰⁾

- 남은 기간 1년 25명(지법부장으로 지방 실근무 1년)
- 남은 기간 2년 24명(지법부장으로 지방 실근무 없음)

■ 순환근무 범위 ⇨ 장기적으로 공석 6명 발생 예상

■ 1차 순환근무 가능 기간 예측 ⇨ 3년~7년

- 매년 충원 필요 인원 평균 ⇨ 약 4.05명(= 공석 6명 ÷ 1명당 순환근무 기간 1.48년)
- 퇴직자 규모별 순환근무 가능 기간 ⇨ 3년~7년

퇴직자 수 (연평균)	순환근무 가능 기간	산식
10명	3.48년	49명 ÷ 14.05명(퇴직자 10명 + 순환근무 4.05명) = 3.48년
7명	4.43년	49명 ÷ 11.05명(퇴직자 7명 + 순환근무 4.05명) = 4.43년

19) [(1년 × 2명) + (2년 × 25명) + (3년 × 24명)] ÷ 총 51명

20) [(1년 × 25명) + (2년 × 24명)] ÷ 총 49명



5명	5.41년	$49명 \div 9.05명(퇴직자 5명 + 순환근무 4.05명) = 5.41년$
3명	6.95년	$49명 \div 7.05명(퇴직자 3명 + 순환근무 4.05명) = 6.95년$

- ③ 순환근무 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는 방안 \Rightarrow 계속 가능(다만, 2019년~2023년 보임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기간 1~3년 감소)

■ 순환근무 대상 \Rightarrow 서울고 51명 + @

- 2019년~2023년 서울고 보임 합계 51명
- 2024년 서울고 보임 5명
- 2025년부터 보임되는 서울고 고법판사 전원

■ 순환근무 기간 \Rightarrow 2년

■ 순환근무 범위 \Rightarrow 공석 6명 발생 예상

■ 1차 순환근무 가능 기간 예측

- 매년 충원 필요 인원 평균 \Rightarrow 3명(= 공석 6명 \div 1명당 순환근무 기간 2년)
- 2019년~2023년 보임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가능 기간 \Rightarrow 4년~9년

퇴직자 수 (연평균)	순환근무 가능 기간	산식
10명	3.92년	$51명 \div 13명(퇴직자 10명 + 순환근무 3명) = 3.92년$
7명	5.10년	$51명 \div 10명(퇴직자 7명 + 순환근무 3명) = 5.10년$
5명	6.37년	$51명 \div 8명(퇴직자 5명 + 순환근무 3명) = 6.37년$
3명	8.50년	$51명 \div 6명(퇴직자 3명 + 순환근무 3명) = 8.50년$

- 2024년 보임 고법판사는 4년~9년 후 순환근무 실시
- 2025년 이후 매년 서울고 고법판사 3명 이상 보임되는 경우 1차 순환근무 계속 가능

● 장·단점 검토

- (+) 인천부, 수원고의 경우 아직 이원화가 완성되지 않아 소속 고법판사 현원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서울고와 달리 취급할 필요 있음
 - 인천부는 공석(9명) 대비 7명 부족하고, 수원고는 공석(37명, 고법부장 현원 제외) 대비 12명 부족한 상황
- (+) 인천부, 수원고 소속 고법판사를 1차 순환근무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순환근무 지속 가능 기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 순환근무 가능 기간이 1년~3년 감소됨에 불과



- 특히, 순환근무 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의할 때 서울고 고법판사만으로도 1차 순환근무 지속이 가능해 보임
- (+) 서울고 고법판사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 완화 가능
 - 2024년 정기인사에서 1지망 기준 서울고 지원 비율이 78.5%에 달함 ⇨ 순환근무 관련 일부 불이익이 있더라도 여전히 지원자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
- (+) 인천부, 수원고 소속 고법판사의 사기 진작 ⇨ 특히, 인천부의 경우 지원 활성화 기대
- (-) 인천부, 수원고에도 충분한 규모의 고법판사가 신규 보임될 여지가 있음
 - 특히, 수원고의 경우 매년 10명 넘는 인원이 지원하고 있음
 - 당장 지방권 순환근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충분한 규모의 고법판사 보임 후 새삼스럽게 순환근무를 시행하기는 곤란함
- (-) 향후 인력사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이상 최대한 순환근무 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서울고 고법판사의 신규보임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또는 지방권 재판장 공석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지방권 순환근무 실시 여부는 법관들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수도권 고법판사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지방권 순환근무 미실시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 우려
 - 지방권 순환근무를 회피하기 위해 서울고에서 인천부, 수원고로 원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고 지원자가 감소하고 인천부, 수원고 지원자가 증가하는 경우 등
 - 고법판사 지원이 순환근무 실시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적정한 인사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검토의견 ▸ 소극

- 인천부, 수원고의 경우에도 그동안 지방권 순환근무 대상임이 일관되게 공지되어 왔고, 향후 충분한 규모의 고법판사가 신규 보임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지방권 순환근무 실시 여부는 법관들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기존의 원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방권 고법 재판장 외 나머지 공석 충원 방안

- 기본적으로 지방권 고법 재판장 외 나머지 공석은 고법배석(지법판사)으로 충원함이 일반적임

- ① 지법부장의 1차 경향교류 시 희망하는 법관에 한하여 지방권 고법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함

- 초임 지법부장의 경우 2017년~2019년 정기인사에서 시행 ㄹ 실제 전보 사례는 드물

■ 2017년 정기인사 인사희망원 및 희망사무분담 신청 안내문

○ 초임 지법부장의 고등법원 전보 관련

지법부장으로 신규 보임되어 지방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희망하는 법관에 대하여는 지방 소재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부 포함)에 후순위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른 고등법원 판사 및 일정 기수 이상의 지법부장 미만의 판사들로 공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후순위로 진입 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규모는 상당히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없을 수도 있습니다).

■ 2018년~2019년 정기인사 인사희망원 및 희망사무분담 신청 안내문

○ 초임 지법부장의 고등법원 전보 관련

지법부장으로 신규 보임되어 지방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희망하는 법관에 대하여는 지방 소재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부 포함)에 후순위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른 고등법원 판사 및 일정 기수 이상의 지법부장 미만의 판사들로 공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후순위로 진입 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규모는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없을 수도 있습니다).

- 지법부장을 고등법원의 재판장에 보임하는 것은 이원화 취지상 적절하지 않으나(1차 경향교류 지법부장은 고법 재판장 자격 없음) 고법배석 보임은 희망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

- ② 한편, 지방권 고등법원별 이원화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역 내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가령, 이원화 비율 높은 부산고에서 비율 낮은 울산부, 창원부로 일정 규모로 순환근무 실시하는 방식
- 그러나 ① 순환근무로 인한 본원 공석에는 고법배석 충원이 불가피하여 순환근무로 인한 실익 크지 않은 점, ② 광주고에서 전주부, 제주부로의 순환근무는 현실적으로 시행 곤란한 점, ③ 지방권 이원화 속도가 매우 더딘 가운데 순환근무의 부담까지 더해지면 지원유인이 매우 낮아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극 검토함이 타당

3. 경인권 순환근무 관련 검토

가. 개요

- 종래에는 2차 순환근무로 경인권 공석을 충원하였는데, 2024년 정책 변화로 **2차 순환근무 폐지** ➡ 향후 **경인권 공석을 예측**해보고, 이를 토대로 **충원 방안 검토** 필요

나. 향후 경인권 공석 예측

■ 예측의 전제 ▶ 2차 순환근무 중인 고법판사의 복귀 시기

- 2024년 정기인사에서는 2차 순환근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현재 2차 순환근무 중인 고법판사를 가급적 복귀하도록 함(다만, 경인권 거쳐서 복귀)
- 그러나 2025년 정기인사에서는 2차 순환근무 중인 고법판사가 전원 복귀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경인권 공석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인권 2년 근무 후 복귀를 원칙으로 함이 불가피

■ 법원별 공석 예측

● 인천부

- 재판장 공석 3명

- 원소속 고법판사 중 36기 1명은 2027년에, 37기 1명은 2028년에 각 재판장 보임 가능 ➡ 2028년 이후에는 재판장 공석 1명



- 이원화 유지를 위한 공석 3명

● 수원고 공석 예상

- 재판장 공석 없음

- 현재는 고등부장 포함하여 재판장 전원 충원 가능하고, 2년 내 원소속 고법판사로 재판장 전원 충원 가능(다만, 고법부장 또는 재판장 자격 있는 고법판사의 퇴직 등으로 공석 발생 여지 있음)

- 이원화 유지를 위한 공석 14명

- 지방권으로 순환근무 예정된 고법판사 고려하면 공석 심화 ⇔ 신규 보임되는 고법판사 고려하면 공석 완화

다. 검토방안

■ 개괄

● 경인권 공석 충원을 위하여 서울고 고법판사의 순환근무가 필요함 ☞ 적정한 순환근무 실시 범위 등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순환근무 실시 범위 관련 검토방안

- ① 재판장 공석을 충원하는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방안
- ② 이원화 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방안

● [보론] 지방권과 통합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방안

■ 순환근무 실시 범위 관련 검토

① 재판장 공석을 충원하는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방안

● 개요

- 인천부의 재판장 공석 충원을 위한 범위에서만 서울고 고법판사 대상으로 순환근무 실시하고, 인천부·수원고의 나머지 공석은 신규보임 고법판사 또는 고법배석으로 충원하는 방안



- 2024년 정기인사 기준 인천부 고법배석 4명이고, 수원고에는 고법배석 없음

- 서울고 고법판사 중 종래의 2차 순환근무 대상자들에 대하여 순환근무 실시 가능

● 수도권 인력수급 예측

■ 예측을 위한 고려사항

- 지방권 및 경인권 순환근무 기간을 모두 2년으로 가정
- 신규보임 인원은 고려하지 않음(매년 정책결정 사항)
- 퇴직 예상 인원: 최근 5개년 평균 등 고려하여 서울고 고법부장은 연 5명, 서울고 고법판사는 연 10명, 수원고 고법판사는 연 1.5명으로 가정
- 법원장 및 비재판보직 보임 요인 배제 ☞ 법원장 및 비재판보직 보임 요인은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출, 전입이 비교적 균형을 이룰 수 있음을 고려하여 미반영

■ 2025년~2030년 수도권 인력수급 예측

법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서울고	고법부장 및 고법판사 현원	158	149	142	135	124	107	93
인천부	고법판사 현원	5	5	5	5	3	3	3
수원고	고법부장 및 고법판사 현원	40	35	28	21	19	20	17

● 장·단점 검토

- (+) 지방권 고법과 마찬가지로 경인권 고법에도 재판장 공식 충원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순환근무를 실시 ⇨ 순환근무를 가급적 축소하도록 하는 2024년 정책 결정 취지에 맞게 일관성 있고 간명한 정책 추진 가능
- (+) 수원고 신규보임 추세에 비추어 수년 내 자체 이원화 완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당장 이원화 일부 후퇴된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음
- 수원고 개원 이후 신규보임 추이

법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원고	신규보임 인원	2	3	7	8	3	2



- (+) 서울고에서 경인권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더라도 퇴직자 고려할 때 과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서울고 현원 추이 및 신규보임 필요 인원

법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서울고	고법부장 및 고법판사 현원	158	149	142	135	124	107	93
	현원 유지를 위한 신규보임 인원		9	7	7	11	17	14

- 다만, 이러한 예측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퇴직 규모(연 15명)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것임

■ 퇴직 규모별(연 12명/10명/7명) 서울고 현원 추이 및 신규보임 필요 인원은 아래와 같음 ⇨ 퇴직자 연 7명 이하인 경우 일시적 과원 가능성

퇴직자 수 (연평균)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2	고법부장 및 고법판사 현원	158	152	148	144	136	122	111
	현원 유지를 위한 신규보임 인원		6	4	4	8	14	11
10	고법부장 및 고법판사 현원	158	154	152	150	144	132	123
	현원 유지를 위한 신규보임 인원		4	2	2	6	12	9
7	고법부장 및 고법판사 현원	158	157	158	159	156	147	141
	현원 유지를 위한 신규보임 인원		1	0	0	1	9	6

- (+) 순환근무 소요를 최소화하여 향후 지방권 순환근무 등에 대비할 필요 있음

- 서울고의 2차 순환근무 대상자를 경인권 순환근무로 소진하는 경우 향후 지방권 순환근무 필요할 때 대상자 충분하지 않은 문제



- 경인권 순환근무 실시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지방권 순환근무 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의하더라도 1차 순환근무 대상자가 지방권 순환근무에 앞서 경인권 순환근무를 실시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
- (-) 수원고에 공석 다수 발생하여 신규보임으로 충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고법배석 보임 불가피
- 공석 충원을 위해 급격히 신규보임 규모를 늘리는 것은 기수별 형평 등에 반하여 곤란한 측면
- 수원고 현원 추이 및 신규보임 필요 인원

법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수원고	고법부장 및 고법판사 현원	40	35	28	21	19	20	17
	현원 유지를 위한 신규보임 인원		5	7	7	2	0	3

- (-) 수원고는 서울고에 이어 2022년 정기인사부터 이원화가 완성되어 고법부장 과 고법판사로만 구성되어 왔는데, 다시 고법배석을 보임하는 것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자체가 후퇴한 것으로 인식될 여지
- 서울고 고법판사의 이익을 위해 이원화 후퇴를 용인하였다는 비판 가능

② 이원화 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방안

● 개요

- 현재 인천부, 수원고의 이원화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고 고법판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방안
- 인천부는 총원 9명 중 고법판사 5명, 수원고는 고법부장 포함 40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순환근무 실시
- 서울고 고법판사 중 종래의 2차 순환근무 대상자들에 대하여 순환근무 실시 가능

● 수도권 인력수급 예측

■ 예측을 위한 고려사항 ⇨ 방안 ①과 같음



■ 2025년~2030년 수도권 인력수급 예측

법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서울고	고법부장 및 고법판사 현원	158	144	130	116	101	85	68
인천부	고법부장 및 고법판사 현원	5	5	5	5	5	5	5
수원고	고법부장 및 고법판사 현원	40	40	40	40	40	40	40

● 장·단점 검토

- (+) 수원고에 고법배석 보임이 필요 없고 신규보임 규모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 가능 ☞ 이원화 취지상 고등법원의 공석은 가급적 지법판사가 아닌 고법판사로 충원함이 바람직함
- (+) 수원고 신규보임 추세에 비추어 이원화 유지를 위해 순환근무 실시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순환근무 규모 축소될 가능성 높음

■ 수원고 신규보임 규모(연 1~5명)에 따른 순환근무 필요 인원

수원고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평균
신규보임	1	2	1	2	1	2	1.5
순환근무 필요 인원	4	5	11	7	10	10	7.83
신규보임	3	3	3	3	3	3	3
순환근무 필요 인원	2	4	9	6	8	9	6.33
신규보임	5	5	5	5	5	5	5
순환근무 필요 인원	0	2	7	4	6	7	4.33

- (+) 서울고로서도 일정 규모의 순환근무 통하여 신규보임 여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서울고에서 수원고로의 순환근무는 상대적으로 시행에 부담 적은 편이기도 함
 - 이원화 유지를 위한 순환근무의 경우 재판장 공석 충원을 위한 순환근무에 비하여



서울고 현원 5명~25명 감소

서울고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재판장 공석 충원을 위한 순환근무	고법부장 및 고법판사 현원	158	149	142	135	124	107	93
이원화 유지를 위한 순환근무	고법부장 및 고법판사 현원	158	144	130	116	101	85	68
현원 차이			5	12	19	23	22	25

- (-) 순환근무 대상자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이원화 유지를 위한 순환근무 필요 인원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 평균 10.83명

서울고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평균
순환근무 필요 인원	5	10	12	12	11	15	10.83

■ 1차 순환근무 필요 인원(연 평균 3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칫 1차 순환근무 대상자들보다 빠르게 소진될 수 있음(다만, 인천부, 수원고의 신규보임에 따라 순환근무 필요 인원이 줄어들 수 있음)

- (-) 지방권 고법의 경우 재판장 공석 충원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하는 2024년 정책 방향과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 (-) 권역이 다른 서울고와 수원고 사이에 순환근무 실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검토의견 ▷ ① 재판장 공석을 충원하는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방안

- 전국 단위 이원화 완성에 구애받기보다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을 강화하여 순환근무를 축소하고자 하는 2024년 정책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경인권의 경우에도 순환근무를 통해 이원화 비율을 유지하는 것보다 가급적 전보인사 없이 재판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지방권 순환근무 등에 대비하여 순환근무 소요를 최소화할 필요도 있음
- 수원고의 공석은 당장 고법배석 보임으로 충원 가능하고 향후 신규보임 추세에



따라 자체적 이원화 완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순환근무 대상

- 1차 순환근무 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서울고 고법판사 중 기존 2차 순환근무 대상자들에 대하여 경인권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방안이 간명하고 수용 가능성도 높아 보임
 - 다만, 순환근무 필요 인원에 비하여 순환근무 자원이 과다하다는 문제 있음 ☞ 구체적인 순환근무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미세조정 필요
- 2차 순환근무 실시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는 기존 1차 순환근무 면제자(29기~31기 7여명²¹⁾)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경인권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보론] 지방권과 통합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방안

● 개요

- 서울고 고법판사를 대상으로 지방권과 경인권에 1차 순환근무의 형태로 통합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방안
- 앞서 살펴본 ‘가. 지방권 순환근무 관련 검토’ 중 ‘순환근무 대상(주체)에서 경인권(인천부, 수원고) 고법판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채택함과 아울러 충원 대상 법원에 지방권 고법뿐만 아니라 경인권 고법까지 포함하는 형태
- 1차 순환근무는 재판장 공석 충원을 위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므로 수원고에 재판장 공석이 없는 이상 결국 인천부에만 순환근무 검토

● 1차 순환근무 지속 가능 기간 예측

- 순환근무 기간을 2년으로 통일함을 전제로 한 예측

▣ 순환근무 대상 ⇨ 서울고 51명 + @

- 2019년~2023년 서울고 보임 합계 51명
- 2024년 서울고 보임 5명
- 2025년부터 보임되는 서울고 고법판사 전원

21) 전체 1차 순환근무 면제자 중 경인권 소속 고법판사 등 제외



■ 순환근무 기간 ⇨ 2년

■ 순환근무 범위 ⇨ 장기적으로 공석 7명 발생 예상

- 지방권 공석 6명

- 인천부 공석 1명

■ 1차 순환근무 가능 기간 예측

- 매년 충원 필요 인원 평균 ⇨ 3.5명(= 공석 7명 ÷ 1명당 순환근무 기간 2년)

- 2019년~2023년 보임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가능 기간 ⇨ 4년~8년

퇴직자 수 (연평균)	순환근무 가능 기간	산식
10명	3.77년	51명 ÷ 13.5명(퇴직자 10명 + 순환근무 3.5명) = 3.77년
7명	4.85년	51명 ÷ 10.5명(퇴직자 7명 + 순환근무 3.5명) = 4.85년
5명	6.00년	51명 ÷ 8.5명(퇴직자 5명 + 순환근무 3.5명) = 6.00년
3명	7.84년	51명 ÷ 6.5명(퇴직자 3명 + 순환근무 3.5명) = 7.84년

- 2024년 보임 고법판사는 4년~8년 후 순환근무 실시

- 2025년 이후 매년 서울고 고법판사 3~4명 이상 보임되는 경우 1차 순환근무 지속 가능

● 장·단점 검토

- (+) 인천부는 서울고와 생활권역이 다르고 고법판사 지원도 상대적으로 저조하
므로 지방권 고법과 마찬가지로 순환근무를 통해 충원할 필요 있음

■ 고등법원의 경우 지방법원과 달리 서울/경인/지방으로 분류할 실익이 없어 지역 불
문하고 충원이 필요한 법원에 순환근무를 실시함이 합리적임

- (+) 인천부에 재판장 공석이 발생하는 가운데 1차 순환근무의 형태로 공석을 충
원함으로써 순환근무 실시를 최소화할 수 있음 ⇨ 2차 순환근무를 폐지하기로
하는 2024년 정책결정 취지에 부합

- (+) 인천부에 순환근무를 실시하더라도 서울고의 순환근무 지속 가능 기간에 본
질적인 차이가 없음

■ 2025년 이후 매년 서울고 고법판사 3~4명 이상 보임되는 경우 1차 순환근무 지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인천부의 경우 고법판사 신규보임으로 재판장 충원 가능성 있음



- (-) 인천부 근무자와 지방권 근무자 사이의 형평 문제

- 순환근무에 관하여 경인/지방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법관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가까움
- 종래에는 지법부장 1차 지방권 근무 시 인천, 의정부를 지방권으로 취급하여 지방권 1~2년 근무 대신 인천, 의정부 3년 근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7년 인천, 2008년 의정부를 각 지방권에서 경인권으로 재편입 ☞ 과거와 비교할 때 인천은 교통 발전 및 신도시 개발 등에 비추어 수도권으로 취급함이 자연스러움

- (-) 서울고에서 인천부로 2차 순환근무를 실시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임 ⇨ 1차 순환근무로 통합하여 실시할 필요성 높지 않음

- (-) 향후 인력사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이상 최대한 순환근무 자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서울고 고법판사의 신규보임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또는 지방권 재판장 공석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검토의견 ▶ 소극

- 순환근무 관련 문제는 법관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경인권을 지방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의 원칙이나 관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인천부에 2차 순환근무를 실시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고법판사 신규보임으로 재판장이 전부 충원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



V. 지방권 고법판사의 지원 활성화 방안

1. 지방권 고법판사 부족 문제

가. 지방권 고법판사 부족 현상

▣ 전국 고법판사 신규보임 현황

보임 연도	보임 기수	서울고	인천	춘천	수원고	대전고	청주	대구고	부산고	울산	창원	광주고	전주	제주	특허	합계
2011	23~25기	16						2	2							24
2012	24~26기	22				2										24
2013	25~27기	19				1		1	1			2				24
2014	26~28기	21						1	1							23
2015	27~29기	21							2							23
2016	28~30기	11				1									1	13
2017	29~31기	12						1				1				14
2018	30~32기	26				1		1							2	30
2019	25~33기	28			2	3		1	3		3					40
2020	27~34기	19	1		3	3		1	2		1	1			1	32
2021	28~35기	13	1		7	2			3	1					1	28
2022	30~36기	8			8	2	1		2		1				1	23
2023	35~37기	16	2		3	2	1		1			1			1	27
2024	26~38기	5			2	1	1		2	1		2	1		1	16
합계		237	4	0	25	18	3	8	19	2	5	7	1	0	8	337
-대법관 임명		2														2
-고법부장 보임		6				1			1							8
-지방법원 복귀		1														1
-퇴직 등		77	2		3	4		1	4		2					93
-원소속 변경		-5			+3	+1	+1			+1	-1					
원소속 현원		146	2	0	25	14	4	7	14	3	2	7	1	0	8	233
고법판사 공석 ²²⁾		101	9	6	37	18	6	18	15	6	12	15	6	3	16	268
공석 대비 현원 비율 ²³⁾		144.5%	22.2%	0%	67.5%	77.7%	66.6%	38.8%	93.3%	50.0%	16.6%	46.6%	16.6%	0%	50.0%	86.9%

※ 2024년 정기인사 기준

- 서울고는 공석 대비 현원이 무려 44.5% 과원 상태이고, 수원고는 2019년 개원으로 꾸준히 증원되고 있음

22) 법원별 현원(법원장 제외) - 고법부장 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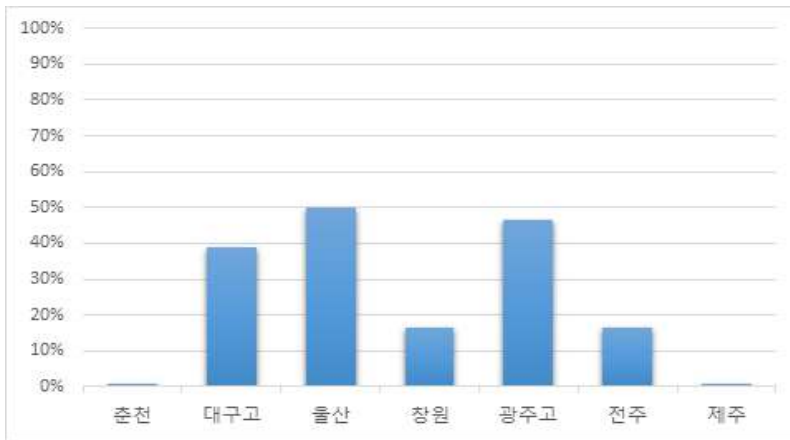
23) 원소속 현원/고법판사 공석 × 100(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 버림)



▣ 지방권 고법판사 현황

구분	춘천	대전고	청주	대구고	부산고	울산	창원	광주고	전주	제주	특허	합계
재판부 수	2	6	2	6	6	2	4	5	2	1	5	41
전체 현원	6	19	6	19	19	6	12	16	6	3	16	128
고법부장	0	1	0	1	3	0	0	1	0	0	0	6
고법판사 공석	6	18	6	18	15	6	12	15	6	3	16	121
고법판사 현원(원소속)	0	14	4	7	14	3	2	7	1	0	8	60
공석 대비 재판부 현원	0%	77.8%	66.7%	38.9%	93.3%	50%	16.7%	46.7%	16.7%	0%	50%	49.6%
재판부 대비 현원	-2	+8	+2	+1	+8	+1	-2	+2	-1	-1	+3	

▣ 고법판사 현원 비율 50% 이하 법원



- 지방권 내 대전고, 청주부, 부산고를 제외한 모든 법원의 고법판사 공석 대비 현원 비율이 **50% 이하**
- 특히 일부 원외부(춘천부, 창원부, 전주부, 제주부)는 재판부 수보다 현원이 적음

- 고법판사 공석 121명 - 원소속 현원 60명 = 현재 기준 61명이 추가 보임되어야 지방권 이원화 완성

- 단순 계산으로 고법판사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14년)이 더 필요하고, 이미 고법판사 희망 자원이 상당 부분 보임된 상태임을 고려하면 추가 기간 소요 예상

▣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 현황

- 2024년 정기인사 기준 지원자 181명 중 1지망에 지방권 고법 신청 비율은 11.0%에 불과
- 청주부, 대구, 울산부, 창원부, 제주부는 1지망 지원자 없음(청주부, 울산부는 2지망 지원자 있음)



■ 최근 5년간 지방권 고법 신청 비율(1지망)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방권 고법 신청 비율	14.1%	11.0%	13.7%	9.7%	11.0%

나.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 유인책 마련의 필요성

■ 지역계속근무 법관들의 지원 저조

- 수도권에 생활근거지를 둔 법관들에게 지방권 근무는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나,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계속근무 법관들(약 150명) 역시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이 저조한 상황
- 지역계속근무 법관은 3~4년마다 전보되고 시외지원 근무도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대도시 근무가 가능한 고법판사 지원을 주저하는 이유를 다각도로 점검해보고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순환근무 축소 정책으로 인한 지방권 공석 심화

- 종래에는 수도권 고법판사의 1차, 2차 순환근무를 통해 지방권 고법판사 공석을 충원하여 지방권 고법에도 이원화 비율 유지 가능
-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을 강화하여 재판장 공석 충원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권 고법판사 공석 심화 불가피 ⇨ 지방권 유인책 마련으로 2024년 정책결정 보완 필요

다.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 유인책 개괄

■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 저조 원인 분석

- 근무지가 지방권으로 고정되는 문제
 - 지방권에서 전보 없이 계속 근무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따른 여러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근무유인 부족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강도 높은 항소심 재판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근무의욕이 저하될 수 있음
- 지역계속근무 법관에 비하여 법원장, 수석부장, 지원장 등 각종 선발성 보직에 대한 근무 기회가 부족함

● 재판장 자격 문제

- 고법판사 보임 후 재판장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재판장이 아닌 법관으로 근무하는 부담이 고법판사 지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상당한 경력을 갖춘 지법부장의 경우 재판장이 아닌 법관으로 근무하는 부담이 더 클 수 있음

■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 유인 방안

- 근무지의 지방권 고정 및 근무유인 부족 문제 ☞ 일정 기간 근무 후 선택에 따라 지방법원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고등법원으로 소속 변경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 검토 필요
- 재판장 자격 문제 ☞ 재판역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판장 자격 완화 검토 필요

2. 지방법원 복귀를 확대 허용하는 방안

가. 개요

- 현재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법판사의 지방법원 복귀 허용

● 법관인사규칙

제11조(전보의 제한)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 2010. 9. 27. 인사총괄심의관 공지글 첨부 '법관인사이원화방안'

6. 전보인사 등



■ 지방법원 복귀 가능 여부

- 고법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10년) 내에 지법판사로 전보될 수 없음
- 고법판사로서 1차 임기를 마친 이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법판사 또는 사군법원 판사로 전보하는 방안 고려

● ‘2011년 정기인사희망원 신청 안내문’

-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 이내에는 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포함)으로 전보되지 아니합니다.
- 고등법원 판사는 고등법원 권역별로 보임되어 일정 기간의 권역 외 근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해당 권역에서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 위 문구가 이후 게시된 아래 공지 내용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기인사희망원 신청 안내문까지 그대로 유지

● 2015. 11. 13. 법원행정처차장 ‘법관인사 이원화와 고법판사 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

셋째로, 고법판사의 지방법원 복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법관인사 이원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고법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의 임기 내에는 지방법원 등으로 전보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법관인사규칙 제11조 참조). 그러나 현재의 고법판사들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운영 경험이 축적되거나 안정화된 모습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보임되었고, 자신의 적성이 고등법원 재판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희망에 따른 지방법원에서의 복귀를 어느 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관 인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면서 법관의 희망과 적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고법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법관이 지방법원으로의 복귀를 희망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개별적으로 지방법원 복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방법원 복귀를 희망한 고법판사의 근무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도 지방법원으로 복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의 법관인사규칙에서 예정한 바대로 법원의 공식규모나 인력사정 등을 종합하여 지방법원 복귀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016년~2024년 ‘법관 정기인사희망원 제출 안내’

- 고법판사가 지방법원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출희망”을 표시한 후 전출희망법원을 기재합니다. 이때 “인사희망사유”에 별지를 첨부하여 그 사유와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법관인사 이원화 현황을 고려하여 **고법판사의 지방법원 복귀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음**

- 2015년~2017년 각 1~2명, 2018년 5명, 2023년~2024년 각 1명 희망하였으나 2015년 1명 외 전부 불허



■ 고법판사의 지방법원 복귀를 확대 허용함으로써 지법부장의 고법판사 지원의 장벽을 낮추어 **지방권 고법판사 충원 활성화** 기대

- 자녀 학교, 배우자 직장 등으로 장래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을 주저할 수 있음 ☞ 지방법원 복귀 허용으로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 유인 가능

■ 나아가 **장기근무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부 고법판사에 대한 선택지 제공, 고법과 지법의 교류 단절 해소** 등 긍정적 효과 기대 가능

- 수도권 고법의 경우에는 적절한 공석을 확보하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음

나. 종래 지방법원 복귀 허용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 **법관 본인의 희망과 적성 존중**

- 장기간 고등법원 근무로 인한 피로감, 본인의 예상과 다른 환경 등으로 지방법원 복귀를 희망할 수 있음
- 고등법원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근무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지방법원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

■ **고등법원 근무 법관의 다양한 구성**

- 희망 법관을 중심으로 지방법원 복귀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기수의 고법판사 근무 기회 확대 가능

■ **이행기 동안 보임된 고법판사에게 선택권 부여**

- 법관인사 이원화의 완전한 모습이 구현되지 못한 이행기 동안 고법판사로 보임된 법관들에게 지방법원 복귀에 대한 선택권 부여 필요성

다. 지방법원 복귀 허용 확대의 필요성

■ **필요성을 긍정하는 견해**

- 고법판사의 지방법원 복귀를 막을 합리적 근거가 없음



- 법관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존중하는 것이 인사의 기본 원칙임

- 고법판사로 장기간 재직 후 근무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곳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음

- 법관인사규칙 제11조는 고법판사가 지방법원으로 전보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할 뿐임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도 지방법원으로 전보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님

● 고법판사의 근무유인 부족 문제 일정 부분 해소 가능

- 지방법원으로 복귀하여 다양한 보직 보임 가능

● 평생 같은 법원에서 같은 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부담 감소 ⇨ 특히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 증가 기대

- 지방법원 복귀가 용이한 경우 지법부장의 근무주기에 맞추어 고법판사 제도 활용 가능 ☞ 가령, 지법부장의 지방권 근무 시 고법판사로 대도시 근무 후 지법으로 복귀 가능(다만, 이는 원칙적인 이원화의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음)

● 그동안의 지방법원 복귀 희망자 규모에 비추어 복귀 희망 법관보다 신규보임 법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

● 고법과 지법의 교류 단절, 조직 분절을 완화하는 긍정적 측면

- 서로 간의 인식 차이를 해소할 계기 마련

■ 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

● 고법판사는 고등법원에서만, 지법판사는 지방법원에서만 근무한다는 것이 이원화의 기본 원칙임 ☞ 지방법원 복귀 허용으로 이원화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

- 특히, 고법판사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원화 후퇴를 감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

● 지방법원 복귀를 허용할 경우 이원화 완성이 요원해질 수 있음

-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복귀 희망 법관이 예상보다 더 많을 수 있음(그동안 복귀 희망자가 적었던 것은 불허가 전례를 고려



한 것일 수 있음)

- 고법 근무 경력만 얻고 곧바로 지법으로 복귀하려는 법관도 늘어날 수 있음
- 일단 지방법원 복귀가 권리로 인식되면 되돌리기 어려움
- 고법판사가 지방법원으로 복귀하여 선발성 보직(법원장, 수석부장, 지원장 등)에 보임되는 것은 이원화에 악영향 우려
- 지방법원 법관 입장에서는 고법판사 보임 자체가 인사상 혜택으로 여겨지는데 지방법원으로 복귀하여 지원장 보임 등의 혜택까지 누리는 경우 박탈감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법관인사 이원화가 후퇴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
- 지방법원의 혼란 가중 우려
- 지법부장 복귀 후 인사패턴 재설정이 필요하나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
- 지방법원 복귀는 이원화 진행 단계임을 감안하여 고등법원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

■ 검토의견 ▶ 필요성을 긍정함이 타당

- 고법판사의 지방법원 복귀를 불허할 합리적 근거가 없음
- 지방법원 복귀 차단이 이원화의 속성상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지방법원 복귀를 확대 허용하는 경우 법관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고법판사의 사기 진작에 도움
- 다만, 지방권 고등법원의 이원화 후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지방법원 복귀 허용 확대에 따른 지방법원 법관의 고법판사 지원 의사 및 고법판사의 복귀 의사 등에 관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고, 수도권 고법판사가 지방권 순환근무 직전에 신청하는 경우 등 그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하여 세심하게 운용할 필요도 있음

라. 지방법원 복귀의 구체적인 허용 방식

1) 신청 자격의 부여 방식



■ 고법판사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 일정 기간 근무한 이후에는 매년 지방법원 복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 2015. 11. 13. 자 공지 내용(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 가능)에 부합
 - (+) 기존 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신청 자격의 폭이 넓어 유연한 운용 가능
 - (-) 다수의 신청으로 이원화 후퇴 우려

■ 고법판사 보임 후 특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 특정기간이 경과하는 해에 지방법원 복귀 자격을 부여하되 그 후 다시 특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복귀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
 - (+) 2010. 9. 27. 고법판사 제도 도입 당시에는 임기를 10년으로 하여 1차 임기 후 지방법원으로 복귀를 허용하는 것으로 공지
 - (+) 무분별한 지방법원 복귀 신청을 방지하고, 고법판사 인사운용에 있어서 예측가능성 확보
 - (-) 경직된 인사운용 초래 위험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귀를 허용할 여지를 확보해둘 필요도 있음

■ 검토 ▶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 이원화 현황 고려할 때 유연한 인사운용을 확보할 필요가 여전함
- 특정기간 경과할 때마다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은 문제 소지
 - 특정기간 설정이 다소 작위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고, 제도 운용이 경직될 우려
 - 특정 시기에 신청 자격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지방법원 복귀를 부추길 여지
 - 한편, 고법판사 제도 자체를 임기제로 운영하는 방안(임기 후 지방법원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연임심사를 등을 거쳐 연장 여부 결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고법판사의 선발적 성격이 강화되는 등 이원화 취지에 반함 ☞ 이원화의 기본 취지는 발탁이 아닌 분리

2) 근무기간 요건

▣ 근무기간 요건을 5년, 7년 10년으로 나누어 검토

▣ 고법판사 근무기간별 현원

근무기간	서울고	인천	춘천	수원고	대전고	청주	대구고	부산고	울산	창원	광주고	전주	제주	특허	지방법원 합계	총 합계
10년 이상	41				1	1	3	1			2				8	49
7년 이상	67			2	2	1	4	1			3			1	12	81
5년 이상	96			5	4	1	6	4	1		3			3	22	123

●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 (+) 2015. 11. 13. 자 공지 내용에 부합
- (+) 종래 1차 순환 전 근무기간이 5년이었던 점 고려하면 최소한의 업무 연속성 유지
- (+) 지방법원 고법판사 지원 유인의 관점에서 5년 초과는 지나치게 장기간
- (-) 당장 신청 자격 보유 법관(지방법원 22명)이 과다한 문제 ☞ 이원화 후퇴 가능성 높음

●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 (+) 7년은 지역계속근무법관의 권역 외 전보 기준, 장기근무법관의 지방권 근무 기간과 일치
- (+) 어느 정도 업무의 연속성 확보 가능
- (+) 지방법원 고법판사 지원 유인의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함
- (-) 이원화 후퇴 가능성 여전히 높음 ☞ 현재 지방권 해당자 12명이나 2년 후 22명

●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 (+) 2011년~2020년 정기인사희망원 신청 안내문 취지에 부합



- (+) 이원화 후퇴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음 ☞ 현재 지방권 해당자 8명에 불과
- (+) 업무의 연속성 확보 가능
- (-)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 유인 효과 의문

■ 가령, 2024년 기준 지방권 지원(8인 이상) 지원장 기수 26기~34기(지법부장 5년 차~13년차) ☞ 고법판사로 10년 이상 근무 시 지원장 보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검토의견 ▷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 지방권 고법판사 유인의 실효성을 고려하면서도 이원화 후퇴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방안
- 10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법관연임기간과 마찬가지로 고법판사 유인 효과 퇴색
- 다만,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 유인 효과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3) 허가 사유의 범위

■ 검토방안

- 허가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
 - 인력수급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복귀 신청을 허가
 - (+) 지방법원 복귀를 확대 허가하는 취지에 부합
 - (+) 인력수급 사정의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신청이 과다한 경우 등 대처 가능
 - (-) 원칙적 복귀 허가를 표방하는 이상 불허된 경우 인사운용에 대한 만족감 하락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가하는 방안
 - 종래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가하되 구체적 시행에 있어서 허가의 범위를 확대
 - (+)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유연한 인사운용 가능
 - (-) 개별 법관 입장에서 제도 확대 체감 어려움

■ **검토의견** ▸ **허가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

-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여 제도 확대 실시를 체감할 수 있는 운영 방안 필요
 - 이원화 후퇴 가능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인력수급 사정에 따른 예외도 함께 공지 필요
- 한편, 근무기간 5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에도 종래 공지에 따라 개별적인 사유를 심사하여 지방법원 복귀를 허가할 수 있음 ⇨ 결국 근무기간에 따라 허가 기준을 차등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

4) 복귀 후 인사패턴

- **원칙적으로 동기 지법부장의 인사패턴에 흡수되는 것으로 취급하되, 근무 권역, 기간, 지역계속근무 법관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미세조정 가능**
- **경향교류 법관의 경우**
 - 동기 지법부장과 비교하여 총 지방권 근무기간이 부족한 경우 지방권 추가 근무 필요 ⇨ 총 지방권 근무기간이 충분한 경우 서울권 또는 경인권 전보 가능
 - 동기 지법부장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지방권에 근무한 후 서울권 또는 경인권 전보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지역계속근무 법관의 경우**
 - 해당 권역의 총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타 권역 전보 필요 ⇨ 총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권역 계속근무 가능(지역계속근무법관과 동일한 기준)

3. 다른 고등법원으로의 원소속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

가. 개요

- **고법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고등법원으로 원소속 변경(전직)**



불가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소속 변경 허용

● 고등법원 또는 원외부 신설 시

- 2019년 수원고, 인천부 신설

- 2018. 11. 5. 법원행정처장 ‘2019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2019년 정기인사에서 서울고 소속 고법판사 3명 수원고 소속으로 변경 허용

4. 수원고등법원 등의 인사 운용

수원고등법원(5개 내외 재판부)과 수원가정법원이 2019. 3. 1.자로 개원될 예정이고,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1개 재판부)도 2019. 3. 1.자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서의 장기간 근무를 희망하는 고법부장, 고법판사의 인사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현재 고법부장, 고법판사 및 판사의 근무를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울산부 신설

- 2020. 10. 29. 법원행정처장 ‘2021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2021년 정기인사에서 창원부 소속 고법판사 1명 울산부 소속으로 변경 허용

3. 울산 원외재판부의 설치

2020. 6. 1. 대법원규칙이 개정되어 2021. 3. 1.자로 울산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민사(가사), 형사, 행정재판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다른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법관 배치에 있어 울산 원외재판부에서의 장기간 근무를 희망하는 고법부장, 고법판사의 인사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 서울고에서 지방권 고법으로 원소속 변경 허용한 사례

- 서울고→대전고 1명, 서울고→청주부 1명

■ 지방권 고법판사 충원 활성화, 장기근무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부 고법판사에 대한 선택지 제공 등의 차원에서 다른 고등법원으로의 원소속 변경을 확대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지방권 고법에서 수도권 고법으로의 원소속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
- 수도권 고법에서 지방권 고법으로의 원소속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

나. 지방권 고법에서 수도권 고법으로의 원소속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



■ 개요

- ① 매년 지방권 고법판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범위에서 수도권 고법판사로 원소속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 ② 지방권 고법판사도 수도권 고법판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고법판사 보임에 있어서 지방권 고법판사를 유리하게 고려하는 방안, ③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원소속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로 인사운용 가능

■ 장·단점

- (+) 수도권 고법 근무 희망 법관들을 지방권 고법에 지원하도록 유도 ⇨ 지방권 고법 지원 활성화 기대
- (+) 지방권 고법판사들의 희망과 사정변경 등을 반영 ⇨ 인사운용에 대한 만족감 향상
- (-) 원소속 변경 희망 법관이 다수인 경우 일부만 허가됨이 불가피 ⇨ 수도권 고법으로의 원소속 변경을 기대하고 지방권 고법에 지원한 법관들의 예측가능성 저하
- (-) 수도권 고법판사 보임이 선발적 성격으로 인식되거나, 수도권 고법과 지방권 고법의 서열화 우려 ⇨ 오히려 지방권 고법판사의 사기 저하

■ 검토의견 ▸ 소극

- 지방권 고법이 수도권 고법 지원을 위한 매개로 인식되어 여러 부작용 발생 우려
- 지방권 고법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에 기초한 이원화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한편, 원소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에 한하여 다른 고등법원에 근무할 기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원간 서열화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
 - 다만, 다수의 지방권 고법판사가 수도권 고법 근무를 희망하게 되면 일부에 한



하여 허용함이 불가피한 점 및 지방권 공식 심화 우려 등의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시행할 필요

다. 수도권 고법에서 지방권 고법으로의 원소속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

■ 개요

- 수도권 고법에서 지방권 고법으로의 원소속 변경은 종래에도 개별 법관의 희망과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허용된 사례 존재 ⇨ 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 장·단점

- (+) 장기근무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고법판사에게 **적절한 선택지**를 마련할 필요
- (+) 고법판사의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지방권 고법으로의 이동 수요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
- (+) 지방권 고법의 공식 충원 효과
- (-) 공식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경우 **수도권→지방권으로의 일방향 이동만 가능**한 현실이 부각될 가능성

■ 검토의견 ▶ 소극(인사운용 차원에서 고려)

- 현재에도 인사운용 차원에서 개별 법관의 희망과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허용 가능 ⇨ 확대 시행할 실익 크지 않음

4. 재판장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

가. 개요

- **현행 법관인사규칙상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되기 위해서는 ① 법조경력 20년 이상, ② 고법판사 보임 후 3년 이상 근무 요건**



법조경력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재판장 보임 시까지 고법판사 근무기간(년)	5	4	3	3	3	3	3	3

▣ 전국 고등법원 직급별 구성 현황

- 고법판사 중 재판장 보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고법판사(P), 고법판사(H)로 분류(A=고법부장, J=지법판사)

법원	재판부 수	가등 법관	재판장 (A)	재판장 (P)	고법판사 (H)	고법배석 (J)	고법판사(H) 중 법조경력 20년 이상
서울고	52	158	57	62	39	0	5명(26기, 27기, 30기, 2024년 신규보임)
인천부	3	9	0	3	2	4	
춘천부	2	6	0	2	0	4	
수원고	13	40	3	21	16	0	2명(31기, 33기, 2024년 신규보임)
대전고	6	19	1	8	6	4	1명(33기, 2022년 신규보임)
청주부	2	6	0	2	3	1	1명(30기, 2022년 신규보임)
대구고	6	19	1	6	1	11	
부산고	6	18	3	6	7	2	1명(30기, 2024년 신규보임)
울산부	2	6	0	2	2	2	
창원부	4	12	0	4	2	6	
광주고	5	16	1	4	4	7	1명(29기, 2024년 신규보임)
전주부	2	6	0	2	1	3	
제주부	1	3	0	1	0	2	
특허	5	16	0	6	4	6	
계	109	334	66	129	87	52	

※ 2024년 정기인사 기준

▣ 2024년 정기인사 ▷ 신규보임 기수 상황

- 법조경력 20년 이상 9명 보임(서울고 5명, 수원고 2명, 부산고 1명, 광주고 1명)
☞ 지법부장으로서는 충분한 재판장 경험이 있음에도 3년간 고등법원 재판장 자



격 없음

- 기수가 높은 신입 고법판사가 기수가 낮은 기존 고법판사와 재판부 구성할 경우 재판장 기수 역전 문제 지적

■ 2024. 3. 7. 법원장 간담회 논의 결과

- 기수가 높은 신규 보임 고법판사가 기존에 고등법원에 보임되었던 기수가 낮은 고법판사와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재판장 기수가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 ⇨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1년 이상 근무한 판사도 고등법원의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법관인사 이원화의 전국적인 완성을 위해서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 지방권 고법의 경우 개방된 기수에서 보임이 이루어져 왔으나, 고법판사 보임 후 바로 재판장을 담당할 수 없는 점이 고법판사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
- 재판장 보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상당한 경력을 갖춘 지법부장의 고법판사 지원 유도 ⇨ 지방권 고법판사 충원 활성화

나. 현행 규정의 내용 및 신설 경과 등

1)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 관련 법령

- 법관인사규칙 제10조 ▷ 재판장 자격에 관한 규정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 ③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

-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4조의5 ▷ 재판장 자격을 갖춘 법관 중 실제 재판장으로 보임하는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의5(고등법원 등의 재판장의 보임)

- ① 고등법원장 및 특허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의 재판장을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3항의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법조경력, 나이, 고등법원 판사 경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
- ② 고등법원장 및 특허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재판장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3항 신설 경과

▣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 요건 설정 배경

- 2020. 3. 24. 법원조직법 개정(2021. 2. 9. 시행) ▷ 고법부장 직위 폐지

법원조직법 제27조(부)

- ① 고등법원에 부를 둔다.
-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삭제)**
- ③ **부장판사는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 2020. 10. 29. 법원행정처장 공지 ‘2021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이 있었고, 해당 규정은 정기인사 일정에 따라 2021. 2. 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보임된 고법부장의 경우 재판장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의 경우 보임시기에 따라 경력이 다양하므로 개정 법원조직법 제27조 제3항의 ‘재판장’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고등법원 합의부 구성 관행을 고려하면서도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일정한 법조경력과 고법판사 근무경력을 갖춘 고법판사가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고법부장 직무대리 인사발령은 정기인사 일정에 맞추어 해제할 예정입니다.

- 법관인사 이원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는 항소심 재판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당한 경력을 갖춘 법관을 고법판사에 보임하면서 재판장 자격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나, 이원화 정착 전 과도기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낮은 경력자를 중심으로 고법판사 보임이 진행되고 있고 기존 고법부장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고려

- **현행 재판장 보임 요건(법조경력 20년 + 고법판사 근무경력 3년)으로 결정 사유**

- ‘법조경력 22년(고법부장 보임 시기) + 고법판사 근무경력 5년’ 등의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법관인사 이원화가 정착되면 고법판사 보임 기수를 상향할 필요가 있고, 종국적으로는 신규 고법판사를 별도로 임용하는 방향도 대비할 필요 고려 ⇨ 장기간의 법조경력이나 근무경력을 요구하기 어려움

- 재판장 보임 자격을 높이면 대등재판부 도입 지연



- 지방권 고등법원의 경우, 기수 개방을 통하여 고기수 지법부장의 보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자체적인 대등재판부 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경력 요건 단축이 필수적임

3) 법원조직법 개정 전후 서울고 관련 논의 경과

■ 2018. 7.~8. 서울고 실질적 대등재판부 관련 설문조사 결과

● 고법판사의 실질적 대등재판부 보임에 관한 바람직한 기준

- 법조경력과 고법판사 근무경력 모두 고려 ⇨ 85명(92.4%)
- 법조경력만 고려 ⇨ 6명(6.5%) / 고법판사 경력만 고려 ⇨ 1명(1.0%)

● 법조경력 20년 및 고법판사 3년 근무 요건의 적정성

- 적정 ⇨ 67명(72.8%)
- 고법판사 경력 강화 ⇨ 11명(12.0%)
- 법조경력 완화 ⇨ 7명(7.6%)
- 고법판사 경력 완화 ⇨ 2명(2.2%) / 법조경력 강화 ⇨ 2명(2.2%)

■ 2020. 6. 서울고 대등재판부 구성(재판장 보임, 구성비율) 관련 논의

- 고법판사의 재판장 보임 관련 고려사항
 - 재판장 보임 기준 설정의 전제
 - 법원조직법 개정 초기로 기존 고법부장 제도와 병존하는 과도기적 상황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법판사에게 재판장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
 - 향후 법조일원화와 법관인사 이원화가 정착되는 경우, 재판장 보임 자격보다 고법판사 전원 재판장 보임을 위한 고법판사 인사기준으로 변경 검토 필요
 - 기준 요건 설정의 의미
 - 법조경력 기준: 법관과 법조 사회 전반에 통용 가능한 보편적 기준
 - 고법판사 근무경력 기준: 고등법원 재판의 특수성과 전문성, 지법부장에서 고법 재판장으로의 종전과 같은 발탁성 인사를 지양하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이상 고법판사로서의 근무경력 필요
 - 다만, 보임 연도가 다른 기수의 고법판사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법조경력 요건 외에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의미는 한정적임
- 재판장 보임 기준 논의
 - ① 법조경력 기준
 - 법조경력 20년 요건



- (+) 기존보다 재판장 경력을 낮추더라도 재판부 전체의 경륜이나 전문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관 자격요건보다 많은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어색 / 고법판사 근무경력 최소 3년 이상을 설정하여 보완 가능
- (-) 고법판사 근무 경력은 재판장 근무기간이 아니므로 재판장 역할에 대한 보완으로 부족 / 동기인 지법부장과 형평

② 고법판사 근무경력 기준

- 3년 요건

- (+) 고등법원 재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경험하기에 충분 / 사무분담 기준(민사, 행정)에 부합 / 지법부장, 재야 법조경력자 유입을 고려한 적정선
- (-) 같은 기수 사이의 형평에 반함 / 이미 고법판사 자격과 법조경력 요건을 갖추었다면 추가 근무 요건 불필요

■ 서울고 사무분담 기본원칙

- 고법판사 대등재판부의 재판장은 20년의 법조경력과 3년의 고법판사 경력을 갖춘 고법판사 중에서 보임할 수 있음
- 22년의 법조경력과 5년의 고법판사 경력을 갖춘 고법판사는 고법판사 대등재판부 재판장에 보임하되, 재판장 보임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장에 보임하지 않을 수 있음
- 20년의 법조경력과 3년의 고법판사 경력을 갖춘 고법판사 중 22년의 법조경력과 5년의 고법판사 경력을 갖추지 못한 고법판사는 재판장 공석, 본인의 희망, 의전서열(기수, 연령), 업무 연속성, 전문성, 종전 담당업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장에 보임

다. 고법판사 근무 요건 완화의 필요성

■ 재판장 보임을 위한 2가지 기준요건 중 **고법판사 근무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함

- 법관인사 이원화 완성 단계에서는 고법판사 보임기수의 상향을 전제하여 왔고, 현 단계에서 상당한 경력을 갖춘 지법부장의 고법판사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법조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완화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견해



- 20년 이상의 법조경력 요건(2024년 정기인사 기준 33기)을 갖춘 경우 경륜이나 전문성은 충분함
 - 20년 이상의 법조경력 = 대법관 자격 요건과 같음
-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장과 다른 특별한 자격을 요구할 근거가 없음 ⇨ 고등법원 재판도 본질적으로 지방법원 재판과 다르지 않음
-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에 따라 실질적 대등합의부(PPP)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 재판장 자격 없는 고법판사는 AHH 재판부 구성원으로 근무하면서 재판장의 의중에 의존하게 될 수 있음
- 이원화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고법판사 보임기수는 상향될 예정 ⇨ 고법판사 보임 후 바로 재판장을 담당할 수 없는 점이 고법판사 지원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2019년부터 개방된 기수에서 보임이 이루어졌으나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지원자는 소수에 불과
- 지방권 고등법원은 재판장 다수 확보하여 재판부 구성에 다양성 확보하고, 수도권 고등법원은 지방권 순환근무 소요 감소 ☞ 양 측이 만족하는 결과

■ 완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

- 고등법원 재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경험할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함
 - 3년은 사무분담 기준(민사, 행정)에 부합하고, 지법부장 재야 법조경력자 유입을 고려한 적정선
 - 현재 고법판사로 보임되는 법관은 종래 고법부장과 달리 고등법원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고등법원의 고령화 현상을 고려할 때 일정한 규모의 재판장 아닌 법관(H)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고등법원에 재판장 아닌 법관이 일정한 규모로 유지되어 고령화된 재판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재판부 구성(PHH)이 필요하다는 시각
- 재판장 보임 요건을 완화하여 지방권 고등법원에서 재판장 공석이 줄어드는 경우 수도권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범위가 축소되는 결과 ☞ 수도권 고법판사의 이익을 위하여 지방권 고등법원 재판역량을 약화하였다는 비판 가능
- 재판장 보임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수도권 고등법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
- 현재 재판장 보임 요건 같으나 수도권 지원자는 많은 상황 고려 필요
- 기존 고법판사와의 형평 문제
- 오랜 기간 고등법원에 근무하고서도 재판장이 되지 못한 고법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 2021년 법관인사규칙 개정 후 불과 4년 만에 다시 개정하는 경우 제도 안정성 저하 우려도 있음

■ 검토 ▶ 필요성을 긍정함이 타당

- 당초 재판장 보임 자격 중 고법판사 근무 요건은 고법부장 직위 폐지 직후 기존 고등법원 합의부 구성 관행 등을 고려한 과도기적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법관인사 이원화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고법판사 근무 경력으로 지위 차이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경력이 높은 지법부장들에게 고법판사 지원의 긍정적 효과 기대
- 다만,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고법판사 3년 근무 요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던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근무 요건 완화 방식 검토 필요

라. 고법판사 근무 요건 완화 방식

■ 현행 고법판사 근무 요건 자체를 수정하는 방안

- ① 고등법원 재판장 자격으로 법조경력 20년 이상만 요구하고 **고법판사 근무**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③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

법조경력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재판장 보임 시까지 고법판사 근무기간(년)	현행	5	4	3	3	3	3	3	3
	수정안	5	4	3	2	1	0	0	0

- 지방권 고등법원에만 실시하는 경우 재판역량 불균형 등의 지적이 있을 수 있어 검토 제외
- (+) 법관인사 이원화 완성 단계에서의 원칙적인 모습(고법판사 보임과 함께 재판장 자격 부여)에 접근
- (+) 상당한 경력을 갖춘 지법부장의 지방권 고법판사의 지원을 활성화하여 조속한 이원화 완성 도모
- (-) 고등법원의 특수성과 전문성 저해 우려
 - 고법판사 근무 요건을 일률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각 고등법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재판부 운용을 저해할 수 있음
- (-) 재판장 보임 요건 개정에 대한 명분이 떨어지고 제도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
 - 현행 재판장 보임 요건 신설 당시에도 개방된 기수의 지법부장이 고법판사로 보임되고 있어 재판장 기수 역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법판사 근무 요건이 삽입됨
 -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다시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변경한다는 비판 가능
- (-) 외부의 비판적 시선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재판장 기수 역전, 지방권 이원화 완성 등 법원 내부의 사정으로 현재 재판장 자격 없는 법관을 대거 재판장으로 보임하려 한다는 비판 가능
 - 다만 이에 대하여는 지방권 이원화 완성 등으로 순환근무 소요를 줄여 재판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 가능

- ①-1 고등법원 재판장 자격으로 법조경력 20년 이상은 유지하고 **고법판사 근무 요건을 단축**하는 방안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③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1년** 이상 근무한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

법조경력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재판장 보임 시까지 고법판사 근무기간(년)	현행	5	4	3	3	3	3	3	3
	수정안	5	4	3	2	1	1	1	1

- 고법판사 근무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검토 ☞ 2년 단축 방안은 요건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 후순위 검토
- (+) 고등법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면서도 상당한 경력을 갖춘 법관의 고법판사 지원 활성화 가능
- (-) 재판장 아닌 법관으로 1년 근무하는 것은 사무분담기간(민사·가사·행정: 3년, 형사: 2년)에 부합하지 않음
 - 서울고의 경우 1년 근무로 재판장 자격을 갖춘 후에도 사무분담기간 확보를 위해 재판부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고법판사 수가 충분하지 않은 지방권 고법의 경우에는 소속 고법판사가 재판장 자격을 갖추게 되면 2024년 정책결정 취지에 따라 그만큼 수도권 고법판사의 순환근무를 실시하지 않게 되어 결국 해당 고법판사가 재판장으로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게 될 것임
- (-) 재판장 아닌 법관으로 근무하는 1년 동안은 재판장 기수 역전 발생 가능
- (-) 고등법원에 1년 근무한 법조경력 20년의 고등법원 재판장을 허용함으로써 외부의 비판 요인 상존

- ② 고등법원 재판장 자격으로 법조경력 20년 이상 또는 고법판사 3년 이상 근무를 **선택적으로 요구**하는 방안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③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또는**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

법조경력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재판장 보임 시까지 고법판사 근무기간(년)	현행	5	4	3	3	3	3	3	3
	수정안	3	3	3	2	1	0	0	0

- (+) 고법판사 근무 요건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에 비해 문리상으로 개정 부담이 적으면서도 보다 완화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

- (-) 법조경력 18년의 재판장도 용인하는 결과 ㄹ 외부의 비판 우려 더욱 커짐

● [3] 고법판사 근무기간에 **지법 합의부장 근무를 포함**하는 방안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③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지방법원 또는 지원 합의부의 재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

■ 지법 합의부장 3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법조경력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재판장 보임 시까지 고법판사 근무기간(년)	5	4	3	2	1	0	0	0

- 고법판사 근무 요건을 지방법원 합의부장 근무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절충안

■ 지방법원 합의부장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⑤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27조(부)

③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30조(부)

① 지방법원에 부를 둔다.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

③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 (+) 2024년 정기인사부터 수도권 고법판사는 지법부장으로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들 중에서 보임하기로 하는 취지에 부합함
- (+) 고법판사 근무 요건을 단순히 삭제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에 비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장으로서의 경력을 요구함으로써 재판장 보임 요건 개정에 적절한 명분을 마련 ☞ 외부의 비판에 대응하기 용이함
- (-) 고등법원 판사 근무경력과 지방법원 합의부장 근무경력을 등가로 규정하기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 가능(체계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
- (-) 고등법원의 특수성과 전문성 저해 우려 여전함
- (-) 단독, 영장, 비재판보직 등으로 합의부장 경력이 짧은 경우 차별 문제
 - 다만, 합의부 재판장 경험의 특수성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과라는 반론 가능

● ④ **법조경력 22년 이상**의 요건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방안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③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판사 중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판사 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

법조경력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재판장 보임 시까지 고법판사 근무기간(년)	현행	5	4	3	3	3	3	3	3
	수정안	5	4	3	3	3	2	1	0

- (+) 기존 요건을 유지하므로 재판장 요건 개정에 따른 부작용 또는 우려 완화
- (+) 법조경력 22년 이상은 종래 고법부장 보임 요건이므로 고법판사 근무 경력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긍 가능
- (-) 고등법원의 특수성과 전문성 저해 우려 남아있음
 - 종래와 달리 법조경력 22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고등법원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 법조경력 18년차~20년차의 경우 재판장 보임 시까지 같은 근무기간이 필요



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 가능

- 재판장 보임 요건에 있어서 법조경력 20년차 이상의 지법부장 근무에 한하여 고법 판사 근무와 함께 평가할 근거 불분명
- (-) 법조경력 22년 미만의 경우(특히 법조경력 20년, 21년) 고법판사 지원 유인 감소

■ **현행 고법판사 근무 요건을 유지하면서 예외를 두는 방안**

● 상정 가능한 예외 사유

- 각 고등법원의 인력수급사정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되기에 충분한 법조경력을 갖춘 경우
- 각 고등법원의 인력수급사정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고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경우

● 상정 가능한 운영 방식

-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재판장으로 보임되는 방식
 - 비부장재판장 승인에 대한 법관인사규칙 제26조 참조
-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각 고등법원의 사무분담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식

■ **검토의견 ▸ 법조경력 22년 이상의 요건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방안**

● 현행 고법판사 근무 요건을 유지하면서 예외를 둘 경우 운영기준의 명확성 약화

- 경우에 따라 일부 법관에 대한 혜택 부여로 인식될 수 있음
- 특히 대법원장 사전 승인 요건을 두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무분담의 영역에 인사발령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 가능

● 현행 고법판사 근무 요건을 개정하는 방안이 간명하고 지속가능성 있음

● 한편, 고법판사 근무 요건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Ⅰ안)은 자칫 재판장 자격 없



는 법관에게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대거 재판장 자격을 부여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 고법판사 근무 요건을 완전히 삭제하는 대신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Ⅰ-1안)**은 고등법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면서도 고법판사 지원을 활성화하는 절충안으로 검토 가능하나, 여전히 외부의 비판 우려가 있고 사무분담기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기존 재판장 보임 요건을 유지하되 **법조경력 22년 이상의 요건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방안(Ⅳ안)**은 재판장 요건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충분한 경력을 쌓은 지법부장의 지원을 유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법조경력 22년 미만의 지법부장에게도 재판장 보임 시기가 일정 기간 단축되어 지원유인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 2024. 7. 서울고 설문조사 결과

■ 개요

- 서울고 소속 법관 187명(겸임청 근무자 포함) 대상
- 88명 답변(응답률 47.5%)

■ 법조경력 요건에 관하여

직위	A	P	H	J/미확인	합계	비율
변경(상향)	1	1	2	1	5	5.6%
유지	15	32	21	4	72	81.8%
변경(하향)		3	1		4	4.5%
폐지		1	6		7	7.9%
총계					88	



▣ 고법판사 근무 요건에 관하여

직위	A	P	H	J/미확인	합계	비율
변경(상향)		1			1	1.14%
유지	11	17	8	2	38	43.1%
변경(하향)	4	6	14	1	25	28.41%
폐지	1	13	8	2	24	27.27%
총계					88	

○ ‘유지’ 의견 관련 추가 설문

- 예외적 완화 시 적절 법조경력

법조경력	인원[명(비율)]
① 21년 이상	4(10.5%)
② 22년 이상	11(28.9%)
③ 23년 이상	5(13.1%)
④ 24년 이상	10(26.3%)
⑤ 기타	2(5.2%)
미응답	6(15.7%)
합계	38

- 예외적 완화 시 바람직한 방안

방안	인원[명(비율)]
① 일정 법조경력 + 고법판사경력 폐지	2(5.2%)
② 일정 법조경력 + 고법판사경력 1년	4(10.52%)
③ 일정 법조경력 + 고법판사경력 2년	11(28.94%)
④ 일정 법조경력 + 고법판사경력 1년 + 재판사무의 연속성 등 고려	4(10.52%)
⑤ 일정 법조경력 + 고법판사경력 2년 + 재판사무의 연속성 등 고려	10(26.31%)
미응답	7(18.42%)



○ ‘변경(하향)’, ‘폐지’ 의견 관련 추가 설문

- 적절 방안

방안	인원(명)
① 고법판사경력 1년 요구	2
② 고법판사경력 2년 요구	10
③ 고법판사경력 3년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일정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고법판사경력 요건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10
④ 기타	3

- 일반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한 예외적 방안

· 적절 법조경력

법조경력	인원[명(비율)]
① 21년 이상	8(32%)
② 22년 이상	7(28%)
③ 23년 이상	2(8%)
④ 24년 이상	4(16%)
⑤ 기타	1(4%)
미응답	3(12%)
합계	25

· 예외적 완화 시 적절 방안

방안	인원[명(비율)]
① 일정 법조경력 + 고법판사경력 폐지	3(12%)
② 일정 법조경력 + 고법판사경력 1년	2(8%)
③ 일정 법조경력 + 고법판사경력 2년	10(40%)
④ 일정 법조경력 + 고법판사경력 1년 + 재판사무의 연속성 등 고려	4(16%)
⑤ 일정 법조경력 + 고법판사경력 2년 + 재판사무의 연속성 등 고려	4(16%)
미응답	2(8%)
합계	25



Ⅵ. 전문위원 제1연구반 논의 경과

1. 일시 및 장소

■ 2024. 9. 2.(월) 15:00 ~ 19:00

■ 대법원 본관 401호 회의실

2. 회의 요지

■ 2024년 정책 변화에 따른 고법판사 제도 개선 방향

①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축소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정책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의 연속성과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고 고법판사의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고법판사의 순환근무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음
-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의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논의를 거쳐 전원이 반대하였음
 - 고법판사의 신규보임 단위를 고등법원 단위(본원과 원외재판부 통합)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하여는 지방권 이원화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음
 - 고법판사의 신규보임 단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하여는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 타당하므로 개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음

② 고법판사의 신규보임 기수 상향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정책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바람직한 이원화의 정착을 위하여 수도권 고법판사의 신규보임 대상을 종래 지법부장 보임 시기의 최초 3개 기수에서 적어도 지방 근무를 마친



지법부장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였음

● 신규보임 대상기수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신규보임 대상기수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신규보임 대상기수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고법판사의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의견
 - 특정 시기에만 어떤 보직에 보임될 수 있고 그때가 지나가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신규보임 대상기수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신규보임 대상기수가 특정되지 아니하면 인사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선발적 성격이 강화된다는 의견
 - 고등법원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므로 신규보임 기수를 지나치게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 한편, 신규보임이 거듭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상기수의 범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고법판사 순환근무 제도의 개선방안

① 지방권 순환근무의 개선 세부방안

- 지방권 순환근무 기간과 관련하여, 고법판사 보임 전 지법부장으로 지방권에 근무한 기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순환근무 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는 방안(③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고, 그 논거로는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순환근무 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는 것이 간명하고 사무분담기간까지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의견
 - 1차 순환근무 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여 순환근무가 지속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2차 순환근무 재실시를 방지하되, 이미 지법부장으로서 지방 근무를 마친 고법판사에 대하여는 순환근무 순서 내지 시기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 순환근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장기미제 처리가 어려워 곤란하다는 의견
-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반대 의견이 있었음
 - 종래 기준에 의할 때 이미 지법부장으로 일정 기간 지방권 근무를 한 후 고법 판사로 보임되어 순환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기존 고법 판사들의 신뢰를 고려하면 ②안(원칙적 순환근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되, 고법판사 보임 전 지법부장으로서 지방권에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
 - 순환근무 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향후 이를 공지한 이후에 신규보임되는 고법판사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2년간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여전히 사직유인 우려가 있으므로 순환근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
- 순환근무 대상에서 경인권(인천부, 수원고) 고법판사를 제외하는 방안에 관하여는 경인권 고법판사에게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음

② 경인권 순환근무의 개선 세부방안

- 경인권 순환근무 실시 범위와 관련하여, 고법판사의 순환근무를 축소하는 정책 방향이 타당하므로 지방권과 마찬가지로 경인권에서도 재판장 공석 충원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방안(①안)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음
- 한편, 경인권 순환근무에 필요한 인원에 비하여 순환근무 자원이 과다하므로 원활한 순환근무 실시를 위해서 순환근무 대상 또는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경인권 순환근무를 1차 순환근무에 포함하여 함께 실시하되 경인권 순환근무의 기간을 지방권 순환근무보다 조금 더 길게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지방권 고법판사의 지원 활성화 방안

① 지방법원 복귀를 확대 허용하는 방안

- 지방법원 복귀 확대 허용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지방법원 복귀 확대 허용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아래와 같음
 - 평생 동일한 법원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
 - 장기간 고등법원 근무로 인한 피로감 또는 본인의 적성과 다른 업무 등으로 지방법원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 1심과 항소심의 교류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의견
 - 지방에 근무하는 법관도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고법판사 지원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법원 복귀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담이 감소하여 고법판사 지원에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 지방법원 복귀 확대 허용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지방법원 판사 입장에서는 고법판사 보임 자체가 이익으로 보이는데 지방법원으로 복귀하여 지원장 보임 등의 혜택까지 누리는 경우 박탈감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법관인사 이원화가 무너지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
 - 고법판사 지원자 입장에서 지방법원 복귀는 먼 훗날의 일로 쉽게 와 닿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고법판사의 지방법원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 정책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지방법원 복귀를 확대 허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7년 또는 10년 근무 후 복귀를 허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고법판사의 임기가 10년으로 공지된 바 있으므로 10년 근무 후 지방법원으로의



퇴로를 열어주게 되면 지원장 보임 기수도 경과하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의견

- 지방법원 복귀 확대 허용에 관한 의견수렴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지방권 고등법원의 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정책효과를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설문조사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 지방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고법판사로 근무 후 지방법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 지원 의사가 있는지, 고법판사들을 대상으로 복귀 의사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면밀한 조사 후 결정하는 것이 좋고, 만일 지원율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굳이 기존 원칙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② 다른 고등법원으로서의 원소속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

- 다른 고등법원으로서의 원소속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에 관하여는 수도권과 지방권의 서열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음
- 이 부분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고등법원에 파견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법원간 서열화 문제 없이 근무지의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지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③ 재판장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

-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 요건 중 고법판사 근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그 논거로는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지방법원에서 합의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보임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
 - 고법판사 근무 요건 때문에 기수가 높은 신입 고법판사가 기수가 낮은 기존 고법판사와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장 기수 역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 반면, 종래 고법부장과 달리 현재 고법판사로 보임되는 법관은 고등법원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등법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경험할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고등법원에 재판장 아닌 법관이 일정한 규모로 유지되어 고령화된 재판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며,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재판장 보임 요건이 완화되면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고법판사 근무 요건 완화는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음
- 고법판사 근무 요건 완화의 방식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법조경력 22년 이상의 법관의 경우 곧바로 재판장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④안)에 찬성하는 의견
 - 고등법원의 특수성을 일정 기간 경험할 필요가 있고 먼저 고법판사에 보임된 법관이 사무분담에서 다소 유리한 지위를 점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고법판사 3년 근무 요건을 폐지하기보다는 1년으로 단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고법판사 근무 요건을 1~2년으로 설정하되 그 후 재판장으로 보임되더라도 재판부를 유지하도록 하여 사무분담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고법판사가 충분하지 않은 법원이 있으므로 고법판사 보임 후 곧바로 재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되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관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건의문

1. 지향점

- 이상적인 심급구조를 통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시행된 후 고등법원 판사의 잦은 순환근무로 인하여 심리의 연속성과 생활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사직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항소심의 재판 역량을 제고하고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판사의 순환근무 제도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10여년 이상 시행되었음에도 지방권 고등법원은 여전히 지원자 부족 등으로 이원화 완성이 지연되고 있고 그로 인해 재판장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권 고등법원 판사의 신규 보임을 활성화하여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 항소심 재판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소송법상 기본원칙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함과 아울러 고등법원 판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 판사의 순환근무는 다른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권 고등법원 판사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근무한 고등법원 판사가 지방법원으로의 복귀를 희망할 경우 이원화의 정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지방법원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은 법관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경우 재판장 보임 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고등법원의 재판장 보임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법관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하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